2021년 6월 15일 발행 / 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 / 발행인 · 황덕순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ISSN 1599-8355

국제노동브리프

| 2021년 6월호 Vol.19, No.6

글로벌 포커스
코로나19가 저소득국에 미친 영향

기획특집 코로나19가 저소득국에 미친 영향
에티오피아의 코로나19 경제위기와 실업
레바논 경제와 노동시장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
코로나19 봉쇄 조치에 따른 러시아 노동시장과 산업구조의 변화 : 야간조명 자료를 이용한 분석

국제노동동향
미국의 단결권 보호법안과 입법 전망
코로나19와 영국의 통합급여
2017년 노동개혁 이후 브라질 노조운동의 시련과 도전

세계노동소식

한국노동연구원

6
Vol.19 No.6
2 0 2 1

contents

글로벌 포커스

코로나19가 저소득국에 미친 영향 3
방형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기획특집 코로나19가 저소득국에 미친 영향

에티오피아의 코로나19 경제위기와 실업 9
Belayneh Kassa Anagaw (에티오피아 바히르다르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레바논 경제와 노동시장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 23
Chris Yessayan (레바논 국가고용청 기술규격·자격국장)

코로나19 봉쇄 조치에 따른 러시아 노동시장과 산업구조의 변화 : 야간조명 자료를 이용한 분석 37
Gi Khan Ten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국제노동동향

미국의 단결권 보호법안과 입법 전망 51
박동우 (미국 코넬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코로나19와 영국의 통합급여 59
채민석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 경제학 박사과정)

2017년 노동개혁 이후 브라질 노조운동의 시련과 도전 68
김경란 (브라질 캄피나스 주립대학교(Unicamp) 사회경제와 노동 박사과정)

세계노동소식 79

International Labor Brief
국제노동브리프

월 간 / 국제노동브리프 6월호
발행인 / 황덕순
편집위원장 / 박제성
편집위원 / 김기선, 김영아, 방형준, 손연정, 안주엽, 이상준, 이승렬, 정동관, 신선호
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
주 소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 044-287-6093
인쇄인 / 송용수
인쇄처 / (주)이환디앤비(02-2254-4301)
등록번호 / 세종 라00012
등록일자 / 2003년 4월 1일
인 쇄 / 2021년 6월 10일
발 행 / 2021년 6월 15일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li.re.kr
정 가 / 6,000원

글로벌 포커스

코로나19가 저소득국에 미친 영향

방형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INTERNATIONAL

L A B O R

B R I E F

코로나19가 저소득국에 미친 영향

방형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난해 초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는 국경이나 소득 수준, 지리적 인접성 등과 무관하게 전 세계 대다수 국가에 퍼져 나갔다. 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해 각국이 국경 봉쇄조치나 자국 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야간 영업과 통행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실업률이 상승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하는 등, 대부분의 나라가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 위기가 시작된 이후 1년여가 훌쩍 지났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유행하고 있다. 백신이 생산되고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나,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경제위기와 경기 침체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백신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제약회사들이 고소득 국가에 주로 있다 보니, 자국에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공급하는 정책으로 인해 저소득 국가에서는 낮은 접종률로 여전히 사회적 봉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 봉쇄 조치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증가는 대부분 국가의 노동시장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고소득 국가의 경우, 재택 근로나 원격수업과 같은 비대면 접촉을 늘렸고, 지난 20여년 간 조금씩 도입되던 원격 근로가 적어도 사무직 노동자들에게는 한순간에 일상적인 상황으로 다가왔다. 비단 근무나 수업 환경뿐 아니라, 식당에서 외식을 즐기는 기존의 식도락 문화나 생활체육 및 여가생활이 중지되거나 비대면으로 바뀌었으며, 새로운 온라인 공간에서 펼쳐지는 사회활동도 등장하였다. 이로 인해 매일 출근하기 위해 필요했던 화장품 및 일부 의류 산업의 규모가 축소되고 비대면 사회에 필수적인 각종 IT 기기에 대

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요식 업계에서도 매장의 종업원 수는 감소한 반면 배달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여 배달업 종사 인력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각국에서 전개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새로운 사회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앞서 살펴보았듯 기존 산업구조의 변화에 부응하여 노동시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실업률과 고용률로 집계되는 산업별 고용 규모나 총고용량과 같은 양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원격근로 유무, 임금, 자율 출퇴근제 등 근로의 질적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경제위기의 원인이 비단 사회적 봉쇄 조치에서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각국 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해외여행 자제를 권유하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취하면서, 교역 시설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거나 교역이 차단됨에 따라 19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던 국제 교역도 줄어들었다. 천연자원을 수출하고 식량을 수입하던 일부 아프리카 및 남아메리카 국가나, 일차 생산물을 수출함으로써 석유 등의 필수 원자재를 수입하던 일부 국가들에 이러한 무역 감소 및 국경 봉쇄 조치는 치명타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앞선 의료 기술과 많은 의료 인력을 확보한 고소득 국가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집계, 현황 파악 및 대응이 상대적으로 수월했지만, 저소득 국가에서는 부족한 사회안전망과 열악한 의료시설, 행정력 미비 등으로 코로나19 위기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많이 접하지 못한 저소득 국가들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난 사회·경제적 변화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점 때문이다.

첫째, 당분간은 백신이 고소득 국가 위주로 보급될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 국가에서는 한동안 코로나19의 영향이 계속될 것이다. 몇 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코로나19 백신이 다수의 국가에 보급되면서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고소득 국가에서는 곧 실현될 미래인 반면, 저소득 국가에서는 당분간 감불생심(敢不生心)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서 대외 교역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라도 저소득 국가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둘째, 고소득 국가보다 저소득 국가가 경제적 특성과 산업구조 및 일자리 구성 등에서 좀 더 분명한 특성을 대변한다. 농업을 비롯한 1차 생산물을 주로 교역하는 국가, 중개무역을 하는 국가, 내수 위주의 국가 등 저소득 국가라 하여도 특성이 다양하며, 고소득 국가와는 달리 경제 전반이 고루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특성이나 산업별로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이해는 향후 유사한 규모의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별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향후 대외 교역에 있어 특정 국가에 대한 편중도를 완화하고 교역선을 넓히며 시장을 개척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타국에 대한 이해의 측면 외에도, 경제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의 소집단별로 받을 충격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일종의 사회적 실험 결과로 해석하여 향후 한국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산업별, 계층별, 사회·경제적 집단별로 효과적인 위기 대응책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호에서 살펴볼 국가들은 에티오피아, 레바논, 러시아이다. 에티오피아는 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커피와 까트, 수산물 등 주로 1차 산업 생산물을 수출하여 공산품을 수입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국경 봉쇄 조치 이후 한동안 에티오피아는 자국 내 농산물을 수출하지도 못하고 필수적인 공산품을 수입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레바논의 경우 중개무역이 발달하고 관광업과 인력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는데, 코로나19와 함께 최대 무역항인 베이루트 항구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사실상 고강도의 국경 봉쇄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 러시아의 경우, 다른 저소득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으며 각종 데이터가 잘 축적되어 있고 영토가 넓어, 지역별로 사회적 봉쇄 조치가 얼마나 강도 높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본호에 실린 러시아 사례의 경우, 러시아 각지의 야간조명이 코로나19 이후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통해 지역별 봉쇄 조치의 강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한 후, 사회적 봉쇄 조치가 지역이나 산업, 노동시장 구성, 그리고 임금 수준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하는 흥미로운 기고문이다.

코로나19 백신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그러나 적어도 백신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국제 교역을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은 명약

관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교역하지 않는 저소득 국가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나 주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당 국가들의 실상에 대해서는 도외시해 왔다. 하지만 이들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하고, 코로나19 대응에서 저소득 국가의 여러 조치와 노력, 그리고 그로 인한 영향을 고찰하는 것은 비단 새로운 시장에 진출한다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측면 외에도 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는 데 은감불원(殷鑑不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KLI

기획특집

코로나19가 저소득국에 미친 영향

기획특집 ① 에티오피아의 코로나19 경제위기와 실업

기획특집 ② 레바논 경제와 노동시장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

기획특집 ③ 코로나19 봉쇄 조치에 따른 러시아 노동시장과 산업구조의 변화 : 야간조명 자료를 이용한 분석

INTERNATIONAL

L A B O R

B R I E F

Special Feature

에티오피아의 코로나19 경제위기와 실업

Belayneh Kassa Anagaw (에티오피아 바히르다르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 서 론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보고된 이후 코로나19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 30일에 코로나19를 국제적인 공중보건 위기로 발표했고, 2020년 3월 11일에는 팬데믹을 선언했다. 지금도 매일 전 세계에서 더 많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보고된다. 긴밀하게 연결·통합된 세상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은 단순히 치명률에 그치지 않으며,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심각한 충격을 겪고 있다.

팬데믹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의하면 특히 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일수록 팬데믹에 더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미 취약했던 사회계층에 부정적인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경제 및 사회적 복지 차원의 어려움이 가중됨을 의미한다. 특히 에티오피아와 같이 인구의 상당수가 빈곤선 주위에 집중되어 있는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다.

에티오피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2021년 4월 6일 기준 확진 건수는 총 21만 9,381건이며 사망 및 회복 건수는 각각 3,025명과 16만 3,969명으로 보고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에티오피아의 주요 경제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영향의 정도는 부문별로 차이가 있다. 특히 서비스부문이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제조업부문이 그 뒤를 따른다. 섬유 및 피혁 제조업, 수출 중심 농업, 운송서비스업, 숙박 및 식료품 서비

스업도 타격이 큰 부문에 속한다. 수출 중심 농업과 쉽게 부패하는 농산물(채소, 화훼 등) 및 유제품 생산의 경우, 수입 비료 및 농약의 공급, 종자 운송 및 유통이 차질을 빚고 있어 더욱 타격이 크다. 팬데믹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활동이 전면 또는 일부 중단되고 이로 인해 투자가 감소하면서 건설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지역시장, 지역 내 및 지역 간 상거래와 상품 교환, 노점상, 관광 및 유흥업, 연예산업, 대외무역 및 운송업 등의 국가 경제활동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에티오피아는 팬데믹 이전에도 심각한 경제 충격을 겪고 있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사회적 불안으로 갈등이 촉발되면서 인명 및 재산피해와 함께 수백만 명의 내부 난민이 발생했고, 사막 메뚜기의 대규모 습격으로 인해 100만여 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농지 부족과 심각한 식량 불안을 겪고 있었다. 한편 콜레라, 홍역, 황열의 확산으로 인해 이미 2018년에 일상적 보건서비스 제공 역량이 필요 수준의 55%에 그치는 상태였다. 이러한 모든 충격은 빈곤, 실업 및 기타 빈곤층 보호 측면에서 에티오피아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세계은행(World Bank) 원자료(2020년 4월부터 매월 가계 및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고빈도 전화조사)와, 에티오피아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s Agency : CSA) 원자료, 에티오피아 계획개발위원회(Ethiopian Planning and Development Commission)의 거시경제 자료를 이용해 에티오피아의 경제 상황을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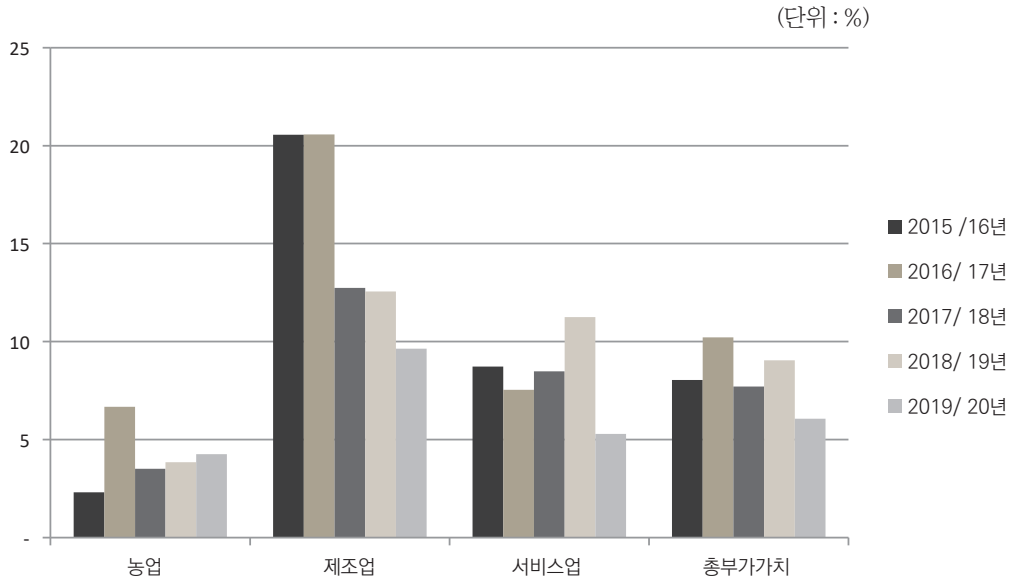
■ 에티오피아 경제 개요

에티오피아는 에리트레아, 지부티,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과 국경을 접한 내륙국가로, 인구는 약 1억 1천만 명이며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인구가 많지만, 국민 1인당 소득은 850달러에 불과한 최빈국 중 하나이다. 에티오피아 경제는 팬데믹 이전에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로는 경제 성장이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농업을 제외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2019/20년 성장률이 전년대비 하락했는데 이는 팬데믹과 관련이 있다. 농업의 2019/20년 성장률은 전년보다 약간 높아졌다.

2019/20년의 경우 서비스업이 에티오피아의 GDP에서 가장 큰 비중(39%)을 차지했고, 농업(36.1%)과 제조업(28.1%)이 그 뒤를 이었다. 코로나19가 각 경제부문에 미친 영향은 부문별로 차이가 있다. 2018/19년 서비스부문 GDP에서는 도소매업이 35.9%를 차지했고, 음식·숙박업(6.5%), 운송통신업(14%), 부동산 임대업 및 기업활동(10.7%), 공공행정 및 국방(11.2%), 금융 중개, 교육, 보건 및 사회사업, 지역사회 및 개인서비스 등의 기타 업종(21.7%)이 나머지를 차지했다. 제조부문, 특히 노동집약적 제조업은 팬데믹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다.[1)]

[그림 1] 주요 산업별 불변가격 GDP 성장률



자료 : Ethiopian Planning and Development Commission(2021) 자료를 기초로 필자 정리.

1) Ethiopian Planning and Development Commission(2021), *The Second 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2019/20 Fiscal Year Macroeconomic Performance Report.*

■ 노동시장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농업 부문과 비공식 부문은 전체 노동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ILO(2020)[2]에 의하면, 많은 아프리카 국가의 노동력 중 약 90%가 비공식 고용에 속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비공식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5%에 이른다.

다른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에티오피아는 다른 생산요소에 비해 노동력이 매우 풍부한 국가이다. 전체 인구 대비 노동력 증가율이 높고 인구분포에서 청년 인구가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노동 공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동력에서 퇴장하는 고령자보다 노동력에 신규 진입하는 15세 미만 인구가 더 많다.

에티오피아 중앙통계청의 추산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의 경제활동인구(15~64세)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에 이른다. 이는 2019/20년 기준으로 5,450만 명이 경제활동인구에 속한다는 뜻이다. 이들 중 대다수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의하면,[3] 2019/20년에는 전체 노동력의 약 79%(중앙통계청 추산에 의하면 4,300만 명 이상)가 취업자였다. 부문별 취업 비중을 살펴보면, 농업이 68%로 가장 크고, 서비스업이 22%, 제조업이 10%로 각각 뒤를 이었다.

노동시장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에는 노동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들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다. 에티오피아의 노동시장 제도는 기본적인 규제틀로서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노동자 보호와 일자리 안정 기능이 결여된 형식적 제도에 불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에티오피아의 노동시장 제도에는 노동사회부(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와 그 지역별 부서, 각급 영세·소기업개발국(Micro and Small Enterprise Development Agencies), 노동법원, 노동조합, 종업원회가 포함된다. 또한 에티오피아는 고용관계를 통해 고용 성과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인 법들을 공포했다. 「노동법(Proclamation No. 377/2003)」, 「고용서비스 제공법

2) ILO(2020),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Informal Economy in Africa and the Related Policy Responses",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africa/---ro-abidjan/documents/briefingnote/wcms_741864.pdf (검색일 : 2021.4.5).
3) World Bank(2020a),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 15+, Total(%)(modeled ILO estimate) - Ethiopia", https://data.worldbank.org/ (검색일 : 2021.4.5).

(Proclamation No. 632/2009)」, 「장애인고용권법(Proclamation No. 568/2008)」이 그에 해당하며, 그 외에도 20여 개의 ILO 협약을 비준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와 보호는 대부분 공기업과 일부 민간부문에 한정되어 있다. 비공식 부문과 생계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한 보호는 전혀 없는데, 이들 집단은 부정적인 충격이 가해지는 시기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 코로나19와 고용

코로나19로 인해 인구 이동이 제한되고 음식점, 주점, 소매업체, 비공식 상거래 등이 휴업하면서 가치사슬이 붕괴되고 이는 다시 여러 비공식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경제 충격은 도시의 비공식 및 공식 노동자 모두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도시의 비공식 일자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이 실시한 고빈도 전화조사[4]에 의하면, 2020년 4월 1차 전화조사 응답자의 약 63%는 취업 중이었으며 도시와 비도시지역 사이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조사 기간 동안 에티오피아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동과 기업활동을 제한했다. 비상사태 기간에 기업의 노동자 해고가 금지됐지만, 전화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는 고용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과 같이, 응답자의 63.4%는 전화조사 당시 취업자였으며 나머지 36.6%는 미취업자였다. 미취업자 중 약 26%는 팬데믹 이전에는 취업자였으며, 이 수치는 도시지역으로 한정하면 약 42%로 높아진다. 현재 미취업자 중 62.8%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와 개별 가계의 미흡한 대응이 실직 원인이라고 응답했다.

1차 전화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는 모든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소매업, 제조업, 개인서비스업 등에서 높은 실업률이 나타났다.[5]

4) World Bank(2020b), "Ethiopia-COVID-19 High Frequency Phone Survey of Households", https://www.microdata.worldbank.org (검색일 : 2021.4.5).
5) 농업, 음식업, 운송업 등에서도 많은 실직이 발생했으나, 2020년 5월경 봉쇄 및 제한조치가 완화되면서 이 부문들의 영업이 부분 재개되어 고용 상황 역시 다소 회복되었다.

<표 1> 현재 및 코로나19 이전의 고용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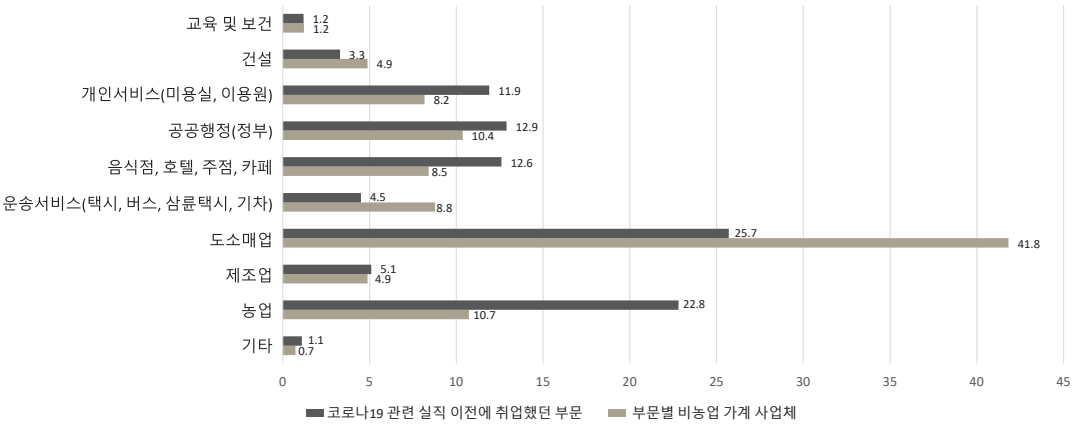
(단위 : %)

	2020년 4월 현재		
	비도시	도 시	전 체
현재 취업자	62.9	64.5	63.4
현재 미취업자	37.1	35.5	36.6
이전 취업자	18.6	42.3	26.0
이전 미취업자	81.4	57.7	74.0
코로나19 이후 실직 원인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61.2	64.3	62.8
계절적·임시적 일자리	27.4	11.2	19.2
한시적 휴직	9.0	13.7	11.4
기타	2.4	10.7	6.6

자료 : World Bank(2020b), "Ethiopia-COVID-19 High Frequency Phone Survey of Households", https://www.microdata.worldbank.org (검색일 : 2021.4.5).

[그림 2] 부문별 코로나19 관련 실직 및 부문별 비농업 가계 사업체 분포

(단위 : %)



주 : 비농업 가계 사업체 중, 직접적인 농업활동은 아니지만 농업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이 있는데(10.73%), 농업 관련 소매 거래, 수공업, 농지임대 및 시설 유지 등 제조업이나 서비스부문에 등록되지 않은 경제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자료 : World Bank(2020b)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정리.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첫 3개월 동안 농업과 도소매업에서의 실직 건수를 합치면 전체 실직 건수의 40%가 넘는다. 고용지위별로는 임시 노동자 가운데 실직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38%), 민간부문 임금노동자(20%)와 자영업자(11%)가 그 뒤를 이었다. 에티오피아 고용에서 자영업은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자영업자의 실직은 전체 개인 실직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전체 실직자 중 54%).

4월부터 10월까지 6회에 걸쳐 실시된 세계은행 전화조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팬데믹 초기에는 응답자의 약 8%가 실직했다고 답했다. 에티오피아의 도시와 비도시지역의 실직 패턴은 상이한데, 도시지역에서 20%가 일자리를 잃은 반면 비도시지역에서는 3%에 머물렀다. 또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가 일자리에 가져온 충격은 남성(6%)보다 여성(13%)에게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지역 노동은 자영업과 임시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도시지역 실직 중 대다수는 숙박·관광업, 건설업, 도소매업에서 발생했는데, 이 부문들이 팬데믹 발발 직후에 휴업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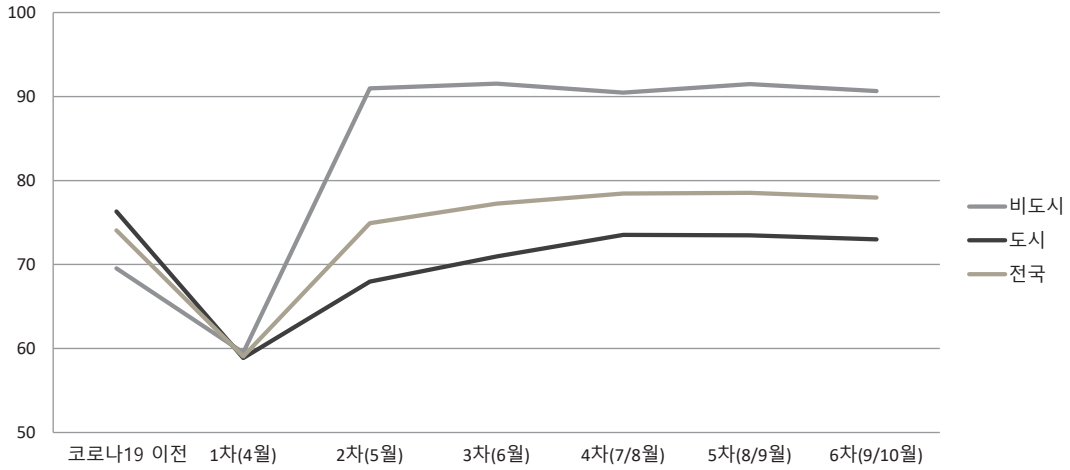
2020년 5월, 에티오피아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행한 제한 조치들을 일부 완화했고 이에 따라 음식업과 운송업 등의 영업이 부분적으로 재개되었다. 결과적으로 5월 이후에는 고용이 강한 회복세를 보였고 10월까지 안정세가 유지되었다. 강한 고용 회복세는 팬데믹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농업이 주종을 이루는 비도시지역에서 나타났다(약 95%의 농업 부문이 팬데믹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됨). 농업 부문에서 고용이 회복된 또 다른 이유는, 봉쇄조치 이후 도시에서 비도시로 대규모 인구 이동이 발생하면서 비도시지역의 신규 유입 인구 상당수가 농업 부문의 가족노동에 종사했기 때문이다. 다른 부문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일부가 농업 부문으로 진입해 정착한다는 점에서 농업은 대체 업종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은 도시와 비도시지역의 취업 동향을 보여주는데, 5월 이후 비도시지역의 고용은 크게 증가했지만 도시지역에서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고용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비도시지역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실직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사라지고 있다. [그림 4]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의 다양한 실직 이유를 보여준다. 4월부터 8월까지는 코로나19가 도시와 비도시지역 모두에서 실직 원인의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비도시지역에서는 8월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이 사라졌다.

코로나19 관련 실직은 응답자의 가계 구성원에서도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이, 응답자 가족 중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실직한 비율은 2020년 5월에는

[그림 3] 전화조사 직전 주에 취업 중이었던 응답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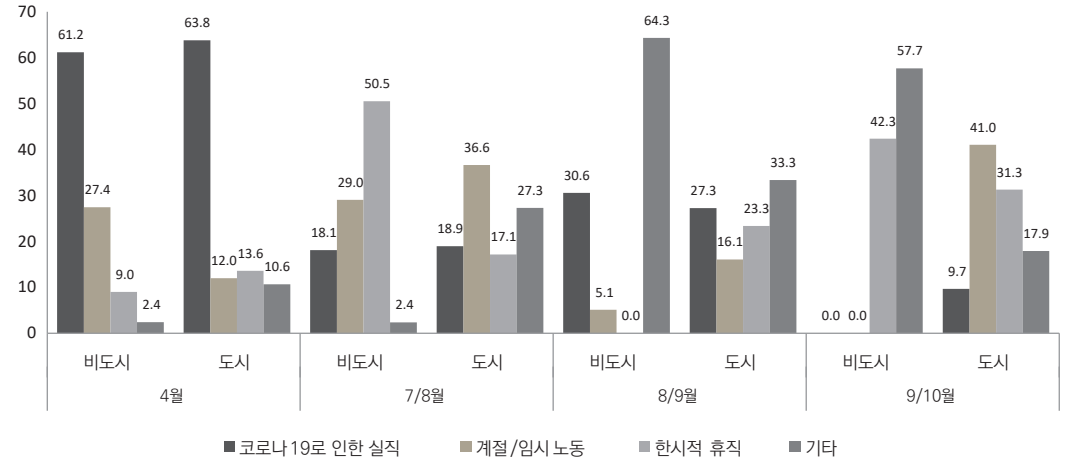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World Bank(2020b)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정리.

[그림 4] 미취업자의 실직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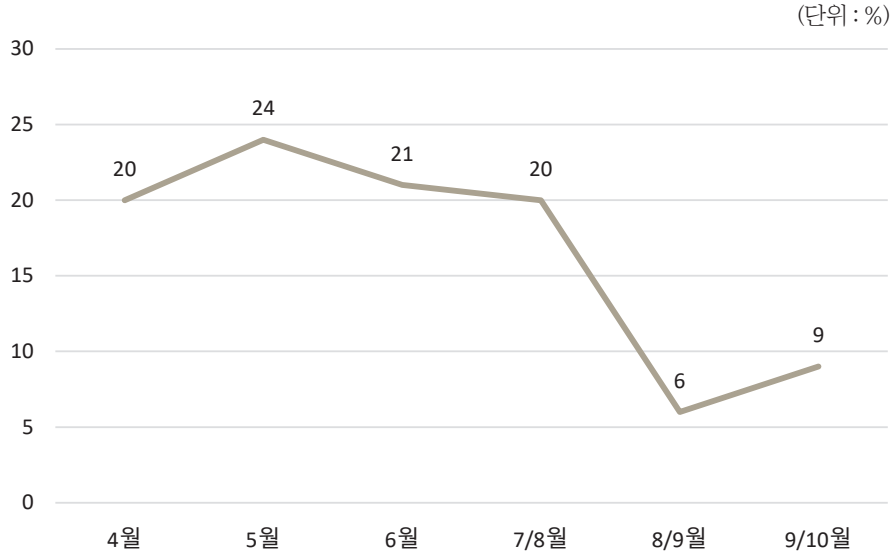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World Bank(2020b)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정리.

24%였지만 7/8월에는 6%로 낮아졌으며, 마지막 조사인 9/10월에는 9%를 기록했다. 에티오피아의 노동시장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사회 불안의 영

[그림 5] 전화조사 응답자 중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가계 구성원이 있는 비율



자료 : World Bank(2020b)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정리.

향도 크게 받는다.

코로나19의 영향은 고용 감소에 그치지 않고 기존의 빈곤 및 취약계층에 또 다른 부담을 가져다 주었다. 팬데믹으로 인해 상당히 많은 가구의 소득이 크게 감소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가구는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가구도 과반수를 차지한다.

25세 미만의 노동력 집단에 대한 2020년 6월 Young Lives(2020)의 조사에 의하면,[6] 응답자 중 27%는 최소 1명의 가계 구성원이 팬데믹으로 인해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관련 자료에 의하면 비공식 노동자가 공식 노동자보다 실직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비공식적 특성이 강한 부문일수록 팬데믹이 고용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 국제개발컨설팅사인 옥스퍼드 정책관리(Oxford Policy Management)의 조사 역시 빈곤·취약층의 60% 이상에서 노동시간이 감소했다는 결과를 통해 위와 같은 사실

6) Young Lives(2020), *Listening to Young Lives at Work in Ethiopia : First Call*, Oxford : Young Lives.

<표 2> 각 가구의 팬데믹 대응 전략

(단위 : %)

	4월	5월	6월	7/8월	8/9월	9/10월
자산 매각(농업 및 비농업)	4.0	1.1	2.0	1.1	1.6	0.7
추가 소득을 얻기 위한 활동	2.8	2.8	3.5	2.8	5.6	3.0
친구나 가족의 지원	3.2	5.3	4.3	6.5	5.8	5.6
친구나 가족에게 자금을 빌림	3.8	5.8	3.9	7.4	11.1	5.9
식품 소비 절감	12.8	19.5	22.7	16.2	13.0	11.4
식품 외 소비 절감	10.0	16.3	17.8	11.9	9.1	12.1
저축액 사용	19.5	21.4	25.6	19.3	20.6	23.0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음	55.2	50.3	46.2	52.9	45.4	50.8
기 타	4.6	3.5	5.5	6.2	8.4	6.0

자료 : World Bank(2020b), "Ethiopia-COVID-19 High Frequency Phone Survey of Households", https://www.microdata.worldbank.org (검색일 : 2021.4.5).

을 확인하고 있다(Harris et al, 2020).[7] 반면, 공식적 성격이 강한 산업공단 노동자의 고용에는 팬데믹의 영향이 크지 않았다. Demeke et al.(2020)[8]에 의하면, 하와사(Hawasa)공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2020년 4월까지의 노동계약 해지건 중 팬데믹으로 인한 해지는 전체 노동자의 2%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여전히 근무하고 있거나(56%) 유급휴직(24%), 무급휴직(7%), 또는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11%)였다. 여러 조사의 통계 수치가 팬데믹이 고용에 미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데, 자영업자나 계절 노동자와 같이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팬데믹이 더 큰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일치된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에티오피아의 경우 노동력의 상당 부분(68%)이 가족노동에 기초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은 팬데믹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학교가 휴업하면서 농업 부문은 가족노동력을 추가로

7) Harris, D., A. Teklu, G. Medhin, I. Mitiku, B. Tadesse, and M. Demissie(2020), *The Effect of COVID-19 and Government Response Measures on Poor and Vulnerable Groups in Urban Areas in Ethiopia. Research Report : Results from the First Round of a Mixed Method Panel Study in Urban Areas in 10 Cities in Ethiopia*, Oxford : Oxford Policy Management.

8) Demeke, E., M. Hardy, G. Kagy, C. J. Meyer, and M. Witte(2020),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Lives of Women in the Garment Industry : Evidence from Ethiopia", https://www.sciencedirect.com/ (검색일 : 2021.4.10).

확보할 수 있었고, 이로써 이동 제한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이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었다.

■ 전반적 평가

2020년 3월 13일 에티오피아에서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2020년 8월까지 확진자 수가 서서히 증가했고 8월 이후에는 1일 확진건이 더욱 늘어나기 시작했다. 현재는 1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에티오피아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위협을 가져올 것이다. 게다가 월레가(Wollega), 베니샨굴 구마즈(Benishangul Gumuz), 티그레이(Tigray) 등, 에티오피아 여러 지역에서의 무력 충돌과 같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내부 난민이 대거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안은 국민의 관심을 팬데믹의 심각성보다 정치 상황으로 돌림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팬데믹은 다양한 부문의 종사자에게 영향을 미쳤다. 특히 건설업, 숙박·유흥업, 도소매업, 교육 및 보건업, 제조업은 팬데믹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부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일부 부문의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가 일부 부문에서의 해고를 막기 위해 면세기간 도입, 직접적인 자금 이전 등의 재정 부양책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여러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로 해고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에티오피아 노동제도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좀 더 주력할 필요가 있다. KLI

■ 부 록

<부표 1> 업종별 불변가격 GDP 성장률(기준연도 : 에티오피아 회계연도 201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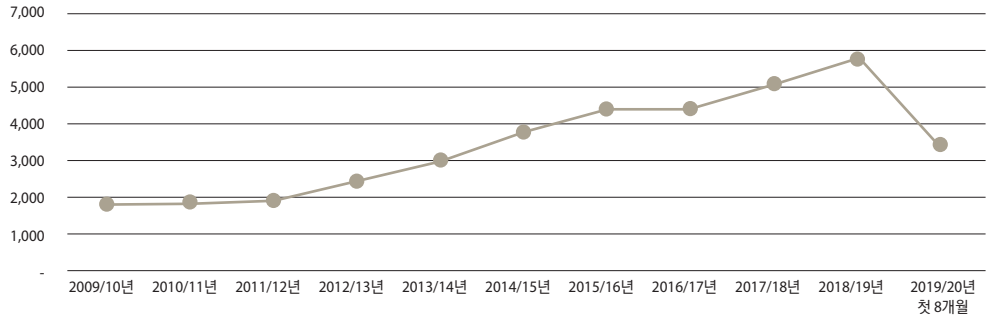
(단위 : %)

	2015/16	2016/17	2017/18	2018/19(A)	2019/20(B)	성장률 차이(B-A)
농업·수렵 및 임업	2.3	6.7	3.5	3.8	4.3	0.5
작물	3.4	8.2	4.7	3.0	4.7	1.7
축산 및 수렵	1.5	4.2	0.6	6.0	3.3	-2.7
임업	2.2	3.6	3.3	3.8	3.9	0.1
수산업	0.1	0.5	11.3	2.3	2.0	-0.3
광업 및 채석업	3.3	29.8	20.8	21.9	91.4	69.5
제조업	18.4	24.7	6.8	7.7	7.5	-0.2
중·대규모 제조업	22.9	19.2	8.4	10.0	9.8	-0.2
영세 및 소규모 제조업	2.5	36.9	3.7	3.0	2.6	-0.4
전기 및 수도업	15.0	12.4	9.6	4.0	7.2	3.2
건설업	25.0	20.7	15.7	15.0	9.9	-5.1
도소매업	8.2	6.5	11.4	11.7	6.4	-5.3
음식·숙박업	15.6	0.1	6.1	9.0	2.2	-6.8
운송·통신업	13.7	15.1	6.4	21.0	1.1	-19.9
금융중개업	9.6	18.3	10.7	13.6	10.2	-3.4
부동산·임대업 및 사업활동	3.7	4.4	6.2	7.5	9.5	2
공공행정 및 국방	7.4	13.2	8.9	9.0	2.3	-6.7
교육업	8.8	3.2	3.6	3.5	1.8	-1.7
보건 및 사회사업	10.8	7.0	8.3	14.3	12.9	-1.4
기타 지역사회·사회 및 개인서비스	3.0	4.5	5.1	6.3	2.5	-3.8
취업자가 있는 민간 가계	4.3	3.5	3.9	2.5	2.3	-0.2
계	8.0	10.3	7.8	9.0	6.2	-2.8

자료 : Ethiopian Planning and Development Commission(2021).

[부도 1] 연도별 해외송금액 변화 추이(2009/10~2019/20년)

(단위 : 백만 달러(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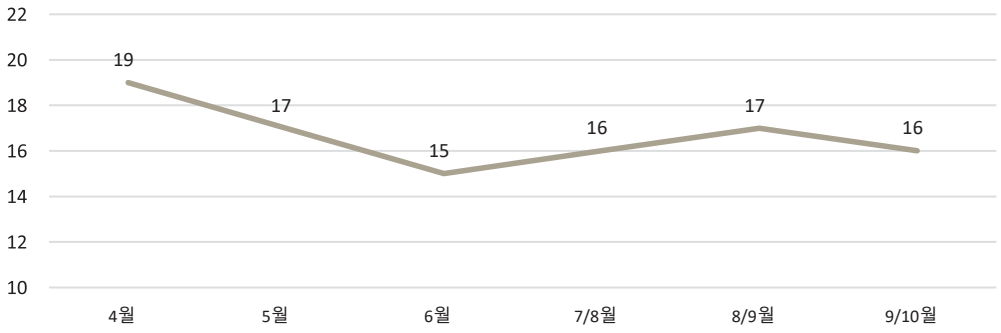


주 : 에티오피아 국민이 이주한 국가들에서 발발한 코로나19는 해당 국가의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이주민이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부도 1]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8개월 동안 해외송금액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자료 : Ethiopian Planning and Development Commission(2021).

[부도 2] 전화조사 응답자 중 최근 4주 동안 취업상태인 가계구성원이 있는 응답자 비율

(단위 : %)



자료 : World Bank(2020b)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정리.

참고문헌

· Demeke, E., M. Hardy, G. Kagy, C. J. Meyer, and M. Witte(2020),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Lives of Women in the Garment Industry : Evidence from Ethiopia", https://www.sciencedirect.com/ (검색일 : 2021.4.10).

· Ethiopian Planning and Development Commission(2021), *The Second 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2019/20 Fiscal Year Macroeconomic Performance Report.*

· Harris, D., A. Teklu, G. Medhin, I. Mitiku, B. Tadesse, and M. Demissie(2020), *The Effect of COVID-19 and Government Response Measures on Poor and Vulnerable Groups in Urban Areas in Ethiopia. Research Report : Results from the First Round of a Mixed Method Panel Study in Urban Areas in 10 Cities in Ethiopia*, Oxford : Oxford Policy Management.

· ILO(2020),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Informal Economy in Africa and the Related Policy Responses",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africa/---ro-abidjan/documents/briefingnote/wcms_741864.pdf (검색일 : 2021.4.5).

· World Bank(2020a),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 15+, Total(%)(modeled ILO estimate) - Ethiopia", https://data.worldbank.org/ (검색일 : 2021.4.5).

· _____(2020b), "Ethiopia-COVID-19 High Frequency Phone Survey of Households", https://www.microdata.worldbank.org (검색일 : 2021.4.5).

· Young Lives(2020), *Listening to Young Lives at Work in Ethiopia : First Call*, Oxford : Young Lives.

Special Feature

레바논 경제와 노동시장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

Chris Yessayan (레바논 국가고용청 기술규격·자격국장)

■ 서 론

전 세계가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역사상 가장 심각한 재정 및 사회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작은 아랍국가 레바논도 최악의 시기를 맞고 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레바논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조명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이전 레바논의 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레바논 정부가 팬데믹 대응을 위해 실시한 예방책을 개략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레바논 경제는 줄곧 자유방임주의 노선에 따라 운영됐으며, 최소한의 국가 개입, 미비한 제도와 관료체제, 질 낮은 공공서비스, 교육 및 보건서비스의 높은 민간부문 의존도, 자유무역, 그리고 특히 레바논 내전 이후의 지대 자본주의(rentier capitalism)가 특징이다. 또한 레바논의 연간 경제성장과 통화안정 유지는 높은 이율로 고수익을 올리는 금융부문과 레바논 이민자 및 관광객으로부터 대량 유입되는 외화 송금액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2019년 10월에 전국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발발하면서 이 모든 것이 무너졌다. 사실 레바논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화 송금액 감소, 심각한 정부 부패 및 국가부채 악화 등과 결부된 구조적 무역 적자의 형태로 오랫동안 성장 둔화를 보여왔다. 이는 외환보유고의 큰 감소와 함께 수십억 달러의 인출 및 해외 유출로 이어지며 금융부문의 유동성 위기를 야기했고, 완전한 금융 붕괴를 피하기 위해 결국 정부는 금융업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레바논은 사상 최초로 외채 불이행을 겪게 되었다. 게다가 레바논

중앙정부는 공공지출과 사업 재정을 주로 공공부채로 충당하고 있으며, 국가 경제는 생산성이 매우 낮은 금융업과 관광업을 주요 토대로 한다. 설상가상으로 이웃 국가인 시리아의 내전으로 레바논은 중요한 전략적 무역 파트너를 잃게 되었고, 2011년 이후 150만 명이 넘는 시리아 난민의 유입으로 인한 비용이 레바논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켰다. 현재 레바논은 전 세계에서 인구 1인당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이다.

레바논의 GDP 성장률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9년에는 -6.7%를 기록했고, 최근 추산에 의하면 2020년 GDP는 약 25%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달러 대비 레바논 파운드의 약화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치솟으면서 두 자릿수의 인플레이션이 이어졌고 가계 대부분의 구매력이 크게 하락했다. 2019년 12월과 2020년 12월 사이에는 145%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했다. 게다가 레바논은 세계에서 국가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2020년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71%에 달했다.

실업률과 빈곤율도 급격하게 높아졌다. 베이루트에 있는 한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1]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년 동안 레바논의 실직자 수는 약 8만 명이며 레바논 인구의 55% 이상이 빈곤선 이하에 속한다. 한편 레바논 사회부의 레바논 위기대응계획(Lebanon Crisis Response Plan) 총책임자는 레바논 인구의 빈곤율이 60%를 넘었으며 극빈곤선 이하에 속하는 비율도 25%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230만 명이 넘는 레바논 국민이 빈곤층에 속한다는 의미인데, 레바논 전체 인구의 95%가 레바논 파운드로 급여를 받고 있다는 점과 환율 붕괴 상황을 감안하면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 레바논의 코로나19 상황

레바논의 코로나19 최초 확진 사례는 2020년 2월 21일에 공식 보고됐다. 3주 후인 3월 15일에 정부는 의료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약국과 슈퍼마켓을 제외한 모든 업소와 기업에 전면 봉쇄 및 영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수도 베이루트와 북부 도시 트리폴리의 빈민지역에는 일당

1) Lebanon24.com(2020.11.30), "80 ألف موظف انضموا لنادي العاطلين عن العمل.. تحذير من أعمال شغب انفجار اجتماعي", https://www.lebanon24.com (검색일 : 2021.4.3).

은 물론 시간당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이 많아 일부 상점은 정부의 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이어갔다. 4월 27일에는 레바논의 유일한 공항인 베이루트 국제공항의 봉쇄를 점진적으로 해제하기 위한 5단계 계획이 시행됐고, 이에 따라 3개월 동안 폐쇄했던 공항의 운영을 7월 1일 재개하여 가동률 10%를 유지하면서 상업비행을 수용할 예정이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의무기간 없이 PCR 검사를 거치도록 했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모든 코로나19 치료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3월 19일에 공항이 폐쇄되기 전, 정부는 귀국을 희망하는 해외 거주 국민에게 4일의 기한을 주었고 모든 해외 거주 국민의 귀국을 위한 철수 계획을 4월 5일부터 여러 차례 실시했다. 입국자들은 PCR 검사와 함께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가 있었지만, 대부분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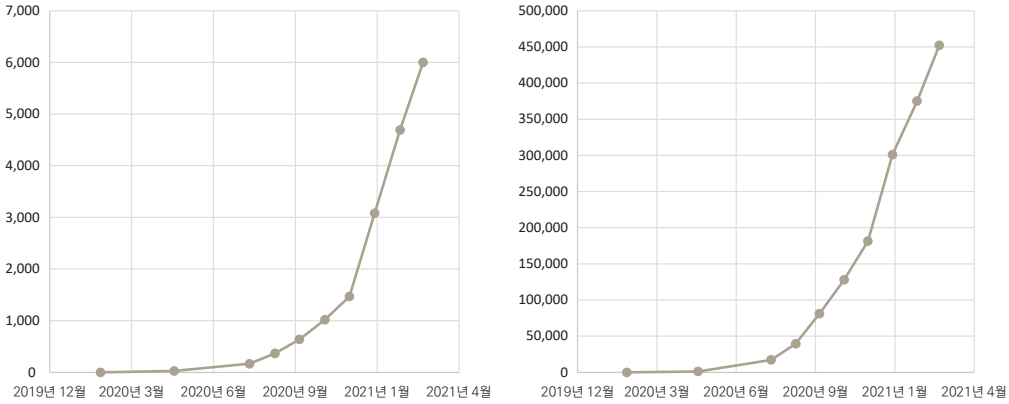
레바논 정부가 실시한 초기 대책은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었지만 공항 운영 재개 이후 1일 확진자 수는 점차 증가했다. 이에 따라 더욱 강도 높은 봉쇄의 가능성도 예견되었으나 열악한 경제 상황과 대량 실직 위험으로 인해 강화된 봉쇄정책 시행에 제약이 뒤따랐다. 2020년 8월 4일에는 베이루트항의 충격적인 폭발사고로 인해 220명이 사망하고 6,50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약 30만 명이 집을 잃었다. 레바논 경제의 생명선으로 여겨지던 베이루트항의 폭발로 주요 곡물 저장고가 파괴되었고 많은 의료시설과 병원이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보건부문의 코로나19 대처능력은 더욱 약화되었다. 베이루트항 폭발사고 직후 코로나19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1일 확진자 수가 잇따라 폭증하면서 급기야 전국 모든 병원에 남은 병상이 거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여기에 더해 달러 부족 위기로 보건부문이 주요 의료장비를 수입하지 못하게 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2021년 1월 7일, 레바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병원에 숨 고를 시간을 주기 위해, 마침내 전국적으로 25일간 엄격한 봉쇄 및 야간 통행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이후 봉쇄조치가 연장되고 일부 억제책은 점차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레바논은 국가 총동원 상태에 있으며 1일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총동원 상태는 향후 6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후로 현재까지, 레바논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각각 45만 2천 명과 6천 명이 넘으며 35만 3천여 명이 회복한 것으로 보고됐다. 코로나19 사망자의 대다수는 고령에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그림 1]에서 코로나19가 발병 첫 6개월 동안에는 꽤 효과적으로 확산이 억제되다가 8월 4일 베이루트항 폭발 이후로 급속

히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가정과 쇼핑몰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연휴기간에 통제불능 수준으로 급증했음을 볼 수 있다. 일부 국민의 책임감과 사회적 의식 부

[그림 1] 레바논 코로나19 사망자(좌) 및 확진자(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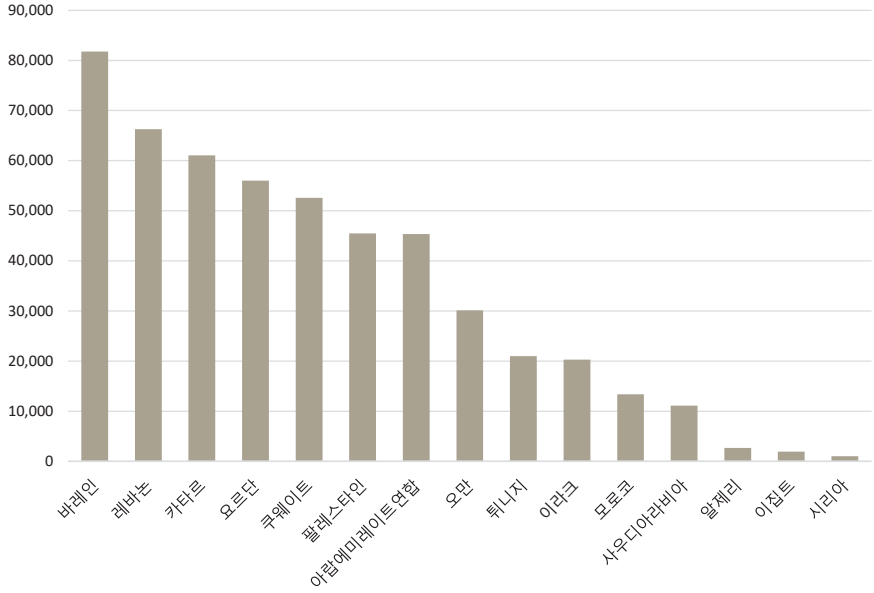
(단위 : 건)



자료 : Humanitarian Data Exchange, https://data.humdata.org (검색일 : 2021.4.3).

[그림 2] 각 아랍국가의 인구 백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수(2021년 3월 25일 기준)

(단위 : 건)



자료 : Humanitarian Data Exchange, https://data.humdata.org (검색일 : 2021.4.3).

족도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모든 아랍국가의 인구 백만 명당 확진자 수를 단순 비교하면, 레바논 사회가 코로나19에 얼마나 취약하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그림 2]에서 2021년 3월 25일 현재 각 아랍국가의 인구 백만 명당 확진자 수를 보면, 레바논은 6만 6,263건으로 전체 아랍국가 중 (국토 크기가 레바논의 1/10 수준인 바레인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레바논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이며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있지만, 식당, 영화관 및 유흥시설은 레바논 사회에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영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 코로나19의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역 부문(건설, 부동산, 소매업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과 같이 지역 차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포함)은 가장 먼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부문이었다. 2019년 총 GDP에서 비교역 부문의 매출액이 차지한 비중은 76%에 이를 정도로 레바논의 비교역 부문은 국가 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생산부문의 산업·제조 기업은 통화 위기, 레바논 파운드의 평가절하, 자금 이동에 대한 대대적인 제약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며 수지를 맞추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고, 외환시장에서 외화를 매우 비싸게 구입해야 했으며 원자재 구매 비용도 큰 부담이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와 일시 영업중지는 고전하던 기업들에 돌이키기 어려운 타격을 가한 셈이다. 내전 이후 정부 정책은 대체로 은행 및 금융서비스와 부동산부문에 맞춰져 있었고 제조업과 농업 부문은 늘 뒷전이었다. 금융 위기로 제조기업의 불안정성은 심화되었고 그중 일부는 재정난 해결을 위해 심지어 다른 업종의 경제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2)]

〈표 1〉을 통해 레바논의 경제 구조를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이 자료는 2019년 기준으로 작성된 가장 최신 자료이다.

2) 여기서 제조업은 식품, 섬유, 도자기, 양모 등을 제조하는 경공업을 말한다.

<표 1> 레바논 GDP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2019년)

(단위 : %)

산업 분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산업 분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농업 및 임업	2.01	도매 및 소매업	10.94
축산업 및 어업	1.07	차량 유지보수 및 수리	1.12
광업 및 채굴업	0.30	운송업	3.19
식품 제조업	2.10	숙박·음식업	3.00
음료 및 담배 제조업	0.97	정보통신	1.90
섬유 및 피혁 제조업	0.34	금융서비스	9.14
목재 및 제지 제조업, 인쇄업	0.56	부동산업	16.39
화학물질,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0.85	전문서비스	3.62
비금속 광물 제조업	0.51	행정서비스	2.74
금속 제품, 기계 및 장비	1.61	공공행정	11.81
기타 제조업	0.47	교육	8.26
전기	1.58	보건 및 사회서비스	3.75
수자원 공급 및 폐기물 관리	0.96	개인 및 지역사회서비스	3.05
건설업	2.58		

자료 : Central Administration of Statistics, "National Accounts Tables 2004-2019", http://www.cas.gov.lb/ (검색일 : 2021.4.2).

봉쇄기간 동안 소매기업과 상점은 모두 휴업하고 중소기업 상당수의 운영은 무기한으로 전면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수천 명의 노동자가 실직했으며 일부는 봉쇄기간 동안 무급휴직을 하거나 급여의 일부만을 받아야 했다. 다행히 급여가 그대로 유지된 이들은 레바논 파운드로 급여를 받았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보고서에 의하면,[3] 2020년 3월에 실시된 최초 봉쇄조치로 인해 특히 빈곤선 이하에 속해 있던 이들과 비공식 또는 계절적 부문의 노동자를 포함한 레바논 국민 수백만 명이 기아 위기에 직면했다.

베이루트에 위치한 UN 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3) Human Rights Watch(2020.4.8), "Lebanon : Direct COVID-19 Assistance to Hardest Hit", https://www.hrw.org/ (검색일 : 2021.4.2).

Western Asia : 이하 “ESCWA”)의 최근 보고서는[4]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레바논의 민간부문 매출이 2019년보다 45% 감소하면서 민간부문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도소매업의 매출은 해당 기간에 47.8% 감소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운송업(-46.6%), 건설업(-45.2%), 제조업(-44.7%), 숙박·음식업(-41.2%)의 매출도 크게 감소했다.

베이루트 공항과 국경이 수개월간 폐쇄되면서 GDP 하락과 외화 유입 감소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레바논 경제의 병목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전술한 바와 같이, 레바논은 서비스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매년 많은 수의 관광객이 서비스부문의 중요한 고객으로 방문한다. 사실 관광객 대부분은 오래전 해외에 정착해 여름휴가철이 되면 고국인 레바논을 방문하는 레바논 이민자들이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전 세계의 해외여행이 중단되면서 레바논이 크게 의존하던 관광업이 파탄에 이르렀다. 게다가 고고학적 유적지와 함께 숙박·음식업 부문도 완전히 휴업 상태였고, 봉쇄기간이 끝난 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수용 가능 인원이 줄어들어 운영 비용이 더욱 늘어났다. 환대산업의 경우에도 공식행사, 지역 및 국제회의, 대규모 사교 모임, 결혼식 및 기타 축하 행사들이 축소·연기 또는 전면 취소되고 봄여름 성수기 영업에 피해를 입으면서 큰 타격을 받았다. 게다가 베이루트항 폭발사고로 호텔 163개소, 음식점 2,040개소, 가구가 구비된 아파트 40채, 택시 250여 대가 부분 또는 완전 파손되었다. 음식점주 연합에 의하면,[5] 봉쇄기간 동안 음식업 부문의 손실액은 월 5억 달러가 넘는다. 레바논 관광업체 단체의 사무총장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6] 관광부문의 2020년 매출은 5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는 2019년 매출인 60억 달러와 크게 비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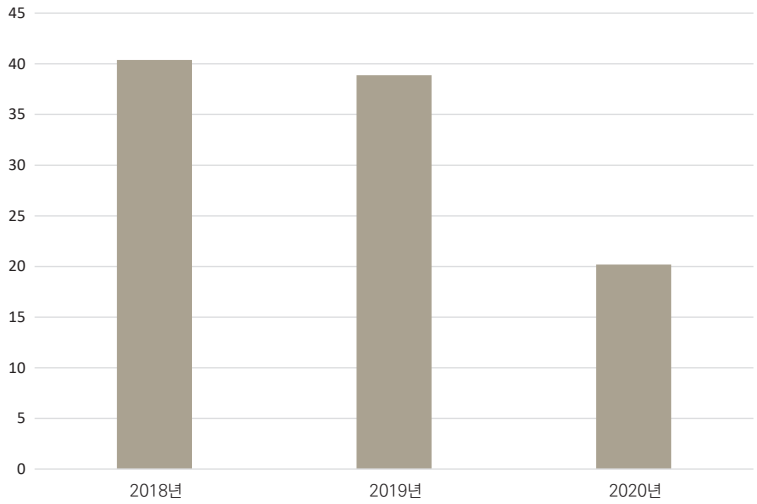
대외무역을 살펴보면, 2020년의 무역적자는 이전보다 감소했다. 코로나19로 2020년 수출량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팬데믹이 수입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면서 2019년에 비해 2020년 수입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2020년의 총수입액은 202억 267만 5천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9년 388억 8,011만 5천 달러와 2018년 403억 7,546만 4천 달러에 비해 크게 감소한 금액이다. 이러한 수입액 감소는 국제 무역과 여행이 중단되고 세계 경제가 멈춘

4) ESCWA(2021.2.10), *Lebanon's Formal Private Sector : the Bitter Reality of 2020*.
5) Elnashra.com(2020.4.9), “نقيب أصحاب المطاعم: القطاع السياحي اللبناني يخسر 500 مليون دولار شهري”, https://www.elnashra.com (검색일 : 2021.4.3).
6) 위와 동일.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3]은 레바논의 2020년 수입액이 지난 2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을 잘 보여준다.

[그림 3] 레바논의 연도별 총수입액(2018~2020년)

(단위 : 10억 달러)



자료 : 레바논 세관 데이터베이스, http://www.customs.gov.lb/Trade_Statistics/Yearly/Country_HS_Results.aspx?Report=By_Country (검색일 : 2021.4.5).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입 감소와 많은 상품 및 물품의 부족은 생산부문이 늘 무시되는 레바논 경제의 운용 방안에 대한 논쟁을 재점화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이와 관련해 의미 있는 방안이나 정책이 시행되지는 않았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소득세 및 수입관세 감소, 세금 사기 또는 탈세, 정부의 납세 유예 결정 등으로 세입이 줄어들어 국내 공공자원이 감소하면서, 레바논 정부가 치솟는 공공부채를 부담할 능력에도 무거운 압박이 가해졌다. 이와 같은 공공자금 및 정부의 여신 부족은 다시 수입 연료의 부족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불안정한 휴대폰 신호와 잦은 정전에서 체감할 수 있었다. 이러한 손실은 부분적으로는 정부가 최근 허용한 납세 유예로 인해 2021년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8월까지의 세입과 2019년 동기간의 세입을 간략하게 비교한 〈표 2〉를 통해 공공세입의 감소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표 2> 레바논의 세입 현황(2019~2020년)

(단위 : 백만 레바논 파운드(LBP), %)

세입 내역	~2019년 8월	~2020년 8월	증 감(%)
소득·수익 및 자본에 부과되는 세금	4,052,611	3,384,021	-16.50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내국세	2,895,564	1,622,547	-43.96
수입 관세	1,288,454	844,178	-34.48
기타 세입	383,048	289,343	-24.60

자료 : 레바논 재무부 자료(http://www.finance.gov.lb/en-us/Finance/EDS/FP/Pages/default.aspx)를 활용해 필자 정리.

■ 코로나19가 레바논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레바논에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동 관련 데이터를 생성하는 공식적인 노동시장 정보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여러 곳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임금 자료뿐 아니라 고용 및 실업 수치도 서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기가 어렵고 그 신뢰도도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바논 중앙통계청(CAS)은 국제노동기구(ILO) 베이루트 사무소와 협력해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노동시장 통계에 관한 상세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에 의하면,[7] 2018년 후반 경제활동인구 수는 약 179만 4천 명이었다(이 중 21.3%는 외국인이고, 3.5%, 즉 5만 5,100명은 복수의 일자리를 갖고 있었다). 노동력은 취업자와 실직자로 나뉘며, 그 수는 각각 159만 명과 20만 4천 명이었다. 〈표 3〉은 2018년 후반의 취업 및 실업 수치를 상세히 보여준다.

2018년 4월부터 (2019년 10월 17일의 반정부 시위와 경제 붕괴가 시작되기 7개월 전인) 2019년 3월까지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국가 경제에 닥칠 위기(청년실업 증가)와 마비 상황의 조짐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24세 실업률은 2012년 18%에서 2018

7) Central Administration of Statistics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2020), *Labour Force and Household Living Conditions Survey 2018-2019 Lebanon*.

<표 3> 2018년 취업 및 실업 현황

(단위 : 명)

주요 경제활동인구 지표	여 성	남 성	남녀 합계	15~24세	25세 이상
15세 이상 인구	1,933,000	1,744,000	3,677,000	846,000	2,831,000
경제활동인구	566,000	1,288,000	1,794,000	331,000	1,463,000
취업자	485,000	1,105,000	1,590,000	254,000	1,336,000
실업자	81,000	122,000	204,000	77,000	126,000
비경제활동인구	1,367,000	516,000	1,883,000	515,000	1,369,000
노동저활용	128,000	174,000	302,000	104,000	198,000
시간 관련 저활용	9,000	22,000	31,000	5,000	26,000
실업자	81,000	122,000	204,000	77,000	126,000
잠재노동력	38,000	29,000	67,000	21,000	46,000

자료 : Central Administration of Statistics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2020), *Labour Force and Household Living Conditions Survey 2018-2019 Lebanon*.

년 23.3%로 급증했다. 이는 시리아 난민의 유입과도 관련이 있는데, 2011년 시작된 시리아 내전의 혼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2017년 후반 이후로도 시리아 이민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시리아에서 유입되는 비교적 저렴한 노동력은 레바논 청년의 실업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베이루트 소재 민간 리서치 기관이 발표한 바 있는 이민자 수가 2018년 3만 3천 명에서 2019년 6만 6천 명으로 두 배 증가한 점과 일맥상통한다.

[그림 4]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각 상반기 6개월에 대한 국가사회보장기금(NSSF) 통계는 노동시장이 취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취업자가 감소하는 상황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현상은 향후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신규 취업자와 최근 실직자 수의 차이가 항상 양수였으며, 이는 NSSF에 등록된 신규 취업자의 수가 등록 해지된 임금노동자의 수보다 늘 많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의 차이는 지난 3년간 점차 줄어들더니, 레바논에 코로나19가 최초 발병한 시기인 2020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9,012명)를 기록했다. 비교하자면, 2017년 상반기에 NSSF에 등록된 신규 취업자 수는 5만 2,682명, 퇴직으로 인해 등록 해지된 자는 4만 200명으로 등록자 수가 1만 2,482명 증가했다.

현재 취업자 수를 정확히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유로는 (사용자가 NSSF에 신고하지 않은) 비공식 노동시장의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코로나19의 파급효과, 베이루트항 폭발사건, 공식 통계와 민간 연구 결과의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레바논에서는 비공식 고용의 비중이 공식 고용보다 높다.

자유로운 비공식적 경제활동에 종사하며 이에 따라 일당 또는 시간당 수입에 의존하는 레바논 국민과 그 가족에게는 봉쇄기간이 힘든 시기였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신뢰할 만

<표 4> 부문별 비공식 및 공식 고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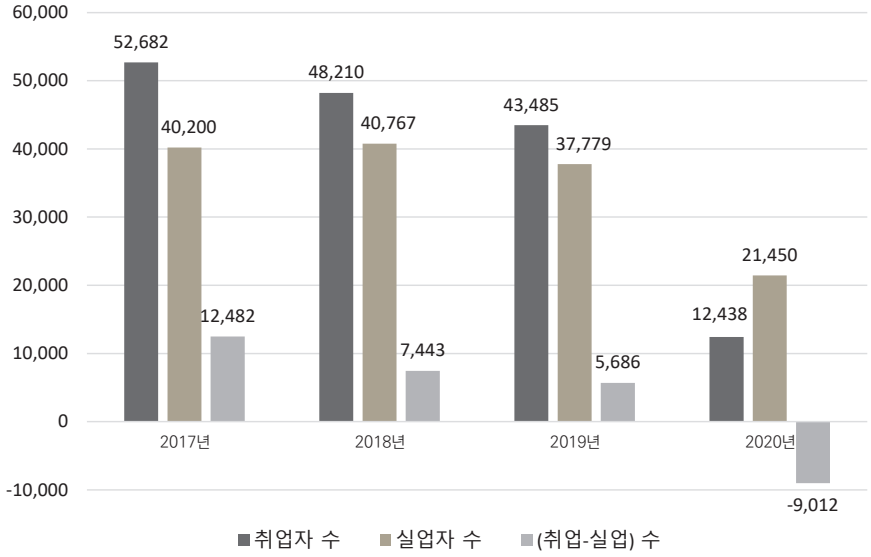
(단위 : %)

고용	부문		
	비공식	공식	계
비공식	99.9	30.5	54.9
공식	0.1	69.5	45.1
계	100	100	100

자료 : Central Administration of Statistics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2020), *Labour Force and Household Living Conditions Survey 2018-2019 Lebanon.*

[그림 4] 최근 4년간 상반기 NSSF 등록 및 해지자 수

(단위 : 명)



자료 : Al-Akhbar.com(2021.2.22), "انهيار في الوظائف والعمل", https://al-akhbar.com (검색일 : 2021.4.3).

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히 평가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민간 연구 결과에 의하면,[8] 현재 약 45만 명이 실직 상태에 있으며, 금융 위기가 심화되고 환율 붕괴가 지속되며 일부 부문에 대한 지원금이 중단되면 이 수치는 7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위축되는 이민자의 수도 전례 없이 늘어날 것이다. 2020년 신규 이민자 수는 1만 7,700명에 그쳤으며 레바논으로서는 비교적 작은 수치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의 공항이 폐쇄되고 새로운 달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애요소가 없었다면, 레바논은 10만 명 이상의 이민자, 즉 10만 명의 유용한 노동력을 잃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팬데믹은 각 경제부문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앞서 언급한 바 있는 ESCWA 보고서에 따르면, 공식 민간부문의 고용은 2019년에 비해 전일제 기준으로 23% 감소했다. 건설업이 가장 많이 감소한 부문으로 40%의 감소율을 기록했고, 그 뒤를 숙박·음식점(-30.9%), 제조업(-26.7%), 도소매업(-23.9%)이 이었다. 반면에 운송업은 미미하지만 0.9%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동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영세 및 소기업의 전일제 수요도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 영세기업과 소기업은 각각 전일제 노동자의 50%와 20%를 해고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수출 기업의 경우에는 수출기업보다 매출도 낮았고 그 결과 전일제 노동자 해고율도 2배 높게 나타났다. 2020년에 비수출기업의 전일제 일자리는 30% 이상 감소한 반면, 수출기업은 예상보다 해외 수요가 많았던 덕에 전일제 노동자의 14%를 해고하는 데 그쳤다.

■ 결 론

레바논은 전례 없이 심각한 경제 및 금융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는 데다가 베이루트항 폭발 사고로 인한 참담한 후유증으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이 국가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독특한 사례이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8) Al-Akhbar.com(2021.3.10), "166عاماً لتعويض الوظائف المفقودة!", https://al-akhbar.com/ (검색일 : 2021.4.6).

환율 붕괴, 은행업의 약화와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전무후무한 폭등과 같은 전반적인 금융 위기 현상들을 고려해야 한다. 팬데믹은 분명 레바논의 경제 침체 및 사회·정치적 혼란을 가속화했다. 레바논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3차 산업은 팬데믹으로 인한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부문이다. 도소매업, 운송업, 숙박·음식업 등에서는 결과적으로 이전보다 매출이 급감하였다. 전 세계 공항이 폐쇄되면서 관광업도 큰 타격을 입었다. 국제 무역에 차질이 생기면서 수출입도 감소했다. 정부가 거둬들인 세입도 소득세와 수입 관세의 감소를 비롯한 여러 이유로 인해 줄어들었다. 팬데믹으로 레바논의 노동시장 상황도 악화되었다. 코로나19 억제책은 기업의 장기간 영업 중단을 의미했으며 이는 급여 삭감뿐만 아니라 일부 경우에는 무급 노동으로 이어졌다. 이는 공식 민간부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고용은 모든 부문에서 감소했지만 특히 건설업과 숙박·음식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노동시장에서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비공식 부문에 관한 자료가 드물기는 하지만, 봉쇄기간과 야간 통행제한 조치가 시간당 및 일당 수입에 의존하는 비공식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었음은 분명하다. KLI

참고문헌

·레바논 세관 데이터베이스, http://www.customs.gov.lb/Trade_Statistics/Yearly/Country_HS_Results.aspx?Report=By_Country (검색일 : 2021.4.5).

·레바논 재무부, http://www.finance.gov.lb/en-us/Finance/EDS/FP/Pages/default.aspx (검색일 : 2021.4.2).

·Al-Akhbar.com(2021.2.22), "انهيار في الوظائف والعمل", https://al-akhbar.com (검색일 : 2021.4.3).

·_____(2021.3.10), "166 عاماً لتعويض الوظائف المفقودة!", https://al-akhbar.com/ (검색일 : 2021.4.6).

·Central Administration of Statistics, "National Accounts Tables 2004-2019", http://www.cas.gov.lb/ (검색일 : 2021.4.2).

·Central Administration of Statistics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2020), *Labour Force and Household Living Conditions Survey 2018-2019 Lebanon.*

·Elnashra.com(2020.4.9), "نقيب أصحاب المطاعم: القطاع السياحي اللبناني يخسر 500 مليون دولار شهري", https://www.elnashra.com (검색일 : 2021.4.3).

·ESCWA(2021.2.10), *Lebanon's Formal Private Sector : the Bitter Reality of 2020.*

·Humanitarian Data Exchange, https://www.data.humdata.org (검색일 : 2021.4.3).

·Human Rights Watch(2020.4.8). "Lebanon : Direct COVID-19 Assistance to Hardest Hit", https://www.hrw.org/ (검색일 : 2021.4.2).

·Lebanon24.com(2020.11.30), "ألف موظف انضموا لنادي العاطلين عن العمل.. تحذير من أعمال شغب وانفجار اجتماعي 80", https://www.lebanon24.com (검색일 : 2021.4.3).

Special Feature

코로나19 봉쇄 조치에 따른 러시아 노동시장과 산업구조의 변화 : 야간조명 자료를 이용한 분석

Gi Khan Ten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 서 론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연간 1인당 GDP와 같은 전통적인 거시경제지표는 집계 후 발표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봉쇄조치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속보성 가계동향조사를 실시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보경제학자들이 종종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척도로 사용하는 월별 야간조명 데이터를 활용해 볼 수 있다(Henderson et al., 2012).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기간에 러시아의 지역[1)]별 취약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지역경제동향 분석의 대리변수로 야간조명 계절조정 데이터를 러시아의 지역별 기존 산업구조에 대한 정보와 연계한다. 그다음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산업 비중에 따라 야간조명 동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한다.

전체적으로, 야간조명은 코로나19 위기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제조업, 광업, 보건산업, 교육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은 팬데믹 이후에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농업과 도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는 동일한 기간에 야간조명 계절조정 데이터로 측정한 경제활동 감소폭이 크지 않았다. 중요한 사실은 농

1) 편집자 주 : 이 글에서 "러시아의 지역"은 한국의 행정구역인 "도"와 유사한 지역 구분이다.

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2020년 전반에 걸쳐 경제활동이 더 증가했다는 점이다.

2020년 2분기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시적인 경기 회복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더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2020년 3분기에는 음식·숙박업 및 유흥업 비중이 낮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증가했다. 이러한 관찰 결과 외에는 2020년 3분기에 산업 비중에 따라 분류한 지역별 야간조명 동향에서 어떠한 의미 있는 차이도 발견하지 못했다. 대신, 2020년 하반기에 전반적인 야간조명 동향에서 완만한 회복세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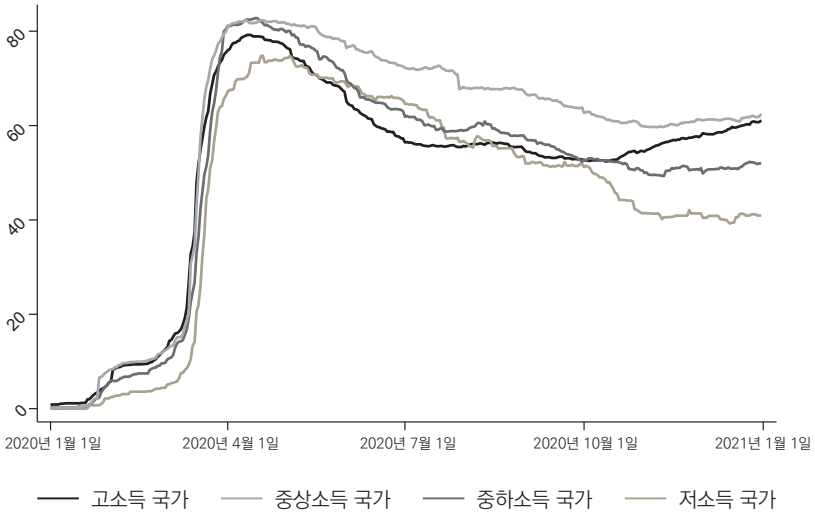
이 글에서는 먼저 러시아의 봉쇄정책을 한국 및 기타 국가들과 비교한다. 그다음 필자의 야간조명 연구 데이터에 대해 설명하고, 야간조명과 코로나19 위기 시작의 상관관계 여부를 논하면서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글을 맺는다.

■ 러시아의 봉쇄조치

코로나19 대응책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전 세계의 평균적인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비교해서 러시아의 봉쇄조치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이 글에서는 옥스퍼드대학교 블라바트닉 행정대학원(Blavatnik School of Government)에서 발표한 국가별 정책 대응 지수인 옥스퍼드 엄격성 지수(Oxford Stringency Index)를 사용한다. 이 지수는 ① 휴교, ② 직장 휴업, ③ 공공행사 취소, ④ 모임 제한, ⑤ 대중교통 운행 중단, ⑥ 외출 제한, ⑦ 국내 이동 제한, ⑧ 해외여행 통제, ⑨ 대국민 경각심 고취 캠페인이라는 9개 항목별로 대응 강도를 측정한다. 옥스퍼드 엄격성 지수의 값이 커질수록 해당 국가의 코로나19 대응 강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Hale et al.(2021)을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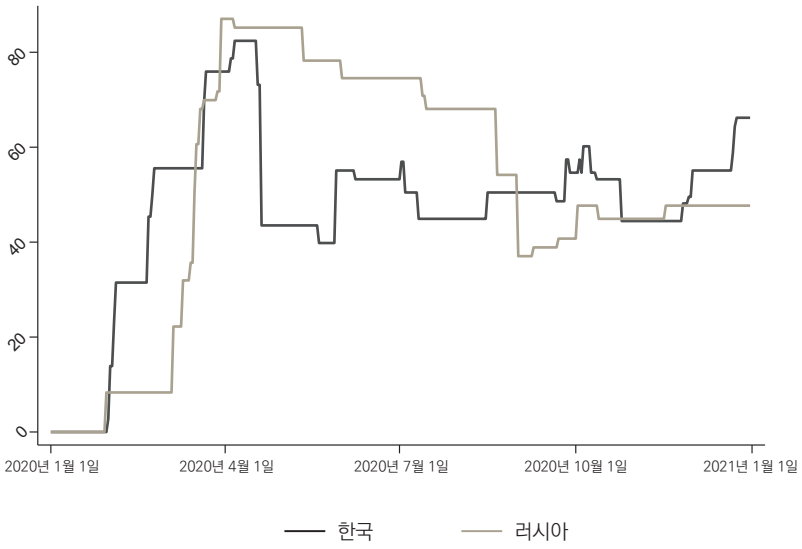
[그림 1]은 186개 국가를 소득수준별로 구분하여 옥스퍼드 엄격성 지수의 추이를 표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봉쇄조치는 2020년 3월 말에 가장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림 2]는 러시아와 한국의 옥스퍼드 엄격성 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러시아와 한국 모두 2020년 3월 말에 최고 강도의 봉쇄조치가 시행되었으며, 봉쇄조치 시행 시기가 전 세계적인

[그림 1] 186개 국가의 소득수준별 옥스퍼드 엄격성 지수



자료 : 옥스퍼드대학교 블라바트닉 행정대학원에서 발표한 옥스퍼드 엄격성 지수를 사용하여 필자가 작성.

[그림 2] 한국과 러시아의 옥스퍼드 엄격성 지수



자료 : 옥스퍼드대학교 블라바트닉 행정대학원에서 발표한 옥스퍼드 엄격성 지수를 사용하여 필자가 작성.

패턴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고강도 봉쇄조치가 지속된 기간이 한국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옥스퍼드 엄격성 지수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한 가지는 봉쇄조치가 최고 수준에 이른 2020년 4월부터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감소했을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봉쇄조치가 급격히 완화된 8월부터 회복세가 관측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 데이터

야간조명 : 콜로라도 광업대학교(Colorado School of Mines) 부설 페인 공공정책연구소(Payne Institute for Public Policy)의 지구관측그룹(Earth Observation Group)에서 위성 VIIRS 센서로 촬영한 실시간 위성사진을 사용한다. 야간 위성사진에서 태양광, 오로라, 화재, 선박 및 기타 일시적 조명의 영향을 보정했고, 구름의 영향으로 오염된 이미지는 제외했다. 이렇게 보정을 거친 야간조명 데이터를 러시아의 광역자치단체 단위 지도(85개 지역)에 적용하여 야간조명값의 평균을 구해 지역별 월별 시계열 데이터를 만들었다.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셋에는 2019년 1월~2020년 12월 사이에 관측된 지역별 월평균 야간조명값이 포함되었으며, 측정값의 단위는 복사휘도(radiance, W/sr·㎡)이다.

인구 : 러시아의 인구 분포는 월드팝(WorldPop) 프로젝트의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지역별 인구 추정치를 사용하였다. 원자료는 100×100미터 격자단위로 집계된 인구이며, 정보를 러시아의 광역자치단체 단위 경계로 표시된 지도와 공간적으로 매칭하였다.

계절조정 : 경제활동의 계절변동 요인이 전월대비 야간조명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계절변동을 조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지역별 야간조명값의 전년대비 변화율을 계산하는 공식을 사용하였다.

$$change_{rmy} = \frac{ntl_{rm(y)} - ntl_{rm(y-1)}}{ntl_{rm(y-1)}}$$

위 식의 $ntl_{rm(y)}$에서 y는 연도, m은 월, r은 지역에서 관측된 1인당 야간조명값을 나타낸다. 이 공식으로 2020년의 전년동월대비 야간조명 증감률을 계산할 수 있다.

1인당 지역별 GDP 및 경제활동참가율 : 이 글에서 사용한 기술통계 분석은 2019년 1인당 GDP와 경제활동참가율에 따라 분류한 러시아 지역집단의 경기 회복 수준을 추적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지역별 거시경제지표는 러시아 연방 통계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지역별 산업 현황 : 러시아 연방 통계청은 매년 각 지역의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데이터를 발표한다. 필자는 이 자료를 이용하여 2019년 지역별 부가가치 비중을 계산하였다. 규모가 가장 큰 4개 산업인 농업(총생산의 8.8%), 제조업(17.6%), 광업(10.3%), 도소매업(13%)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4개 대면 서비스산업인 보건산업(총생산의 4.9%), 교육산업(4.1%), 음식·숙박업(1.14%), 유흥업[기존에는 기타 지역, 사회 및 개인서비스 활동으로 분류됨, 0.8%]을 분석 대상에 추가하였다.

최종 데이터셋 : 이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의 지역별 취약 산업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지역별 특정 산업 부가가치 비중을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러시아의 지역을 두 개 지역집단으로 구분한다. 제조업을 예로 들면 러시아의 지역은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전국 평균인 17.6% 이하인 지역집단(이하, "평균 이하 지역")과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17.6%를 초과하는 지역집단(이하 "평균 초과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지역집단을 분류한 후, [지역집단]×[월] 셀별로 1인당 계절조정 야간조명의 평균을 구한다. 그러면 앞에서 말한 8개 산업부문을 대상으로 총 8개의 데이터셋이 만들어진다. 각 데이터셋에는 해당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전국 평균 이하 또는 초과인 지역별로, 1인당 계절조정 야간조명 데이터의 동향을 보여주는 월별 시계열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평균을 구하는 과정에서 각 항목에 2019년 지역별 인구 비중을 가중치로 적용하였다.

■ 야간조명으로 경제활동을 추적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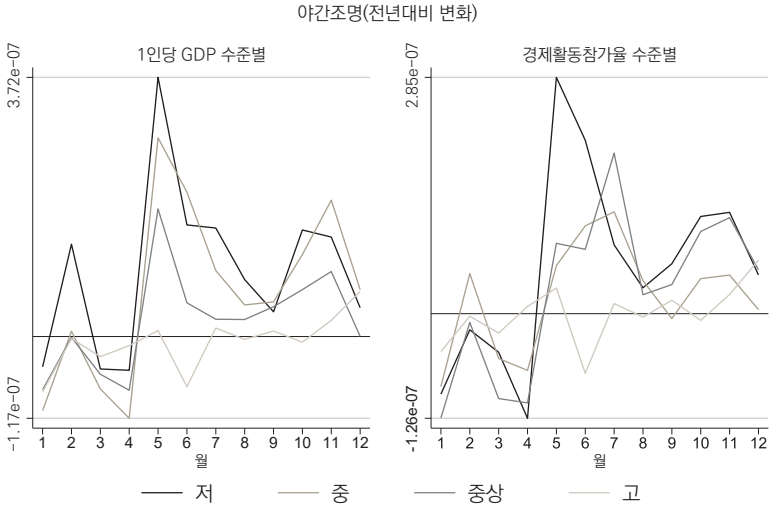
[그림 3]은 2019년 1인당 GDP 및 경제활동참가율 수준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한 러시아의 2020년 지역별 야간조명의 전년대비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왼쪽 그림은 2019년에

측정한 코로나19 위기 이전 1인당 GDP 수준에 따른 분류이며, 1인당 GDP 수준이 높은 고소득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지역집단에서 2020년 1분기에 야간조명이 급감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앞서 [그림 2]에서 살펴본 해당 시기 봉쇄조치 강화와 일치한다. 2020년 2분기에는 2019년 1인당 GDP 수준이 높았던 지역집단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집단에서 야간조명이 빠르게 증가한 특징을 보인다. 2020년 8~9월까지 다시 가파른 하락이 지속되다가 이후에 3개의 지역집단은 다시 회복세로 접어들었고, 이러한 회복세는 2020년 11월까지 이어졌다. 고소득 지역집단이 2020년 4분기에 꾸준한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이 2020년 8~9월 이후로 관측된 야간조명의 증가는 앞서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기간 봉쇄조치 약화와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림 3]의 오른쪽 그림은 2019년 경제활동참가율 수준에 따른 분류로, 왼쪽 그림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지역집단에서는 봉쇄조치 강도가 최고 수준이었던 2020년 4월에도 전년대비 야간조명의 감소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활동참가율이 중상, 중, 저 수준을 보인 지역집단의 야간조명 패턴은 [그림 2]의 봉쇄조치 동향과 일치하는 모습

[그림 3] 러시아의 지역별 야간조명의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



자료 : 콜로라도 광업대학교 부설 페인 공공정책연구소 지구관측그룹의 실시간 위성사진 데이터와 러시아 연방 통계청 자료를 사용하여 필자가 작성.

을 나타냈다. 즉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는 전년대비 야간조명이 급격히 감소했고, 이후 4월과 5월에는 세 지역집단 모두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다시 2020년 7월부터 8~9월 사이에 급감을 기록하였다. 이후 다시 경제활동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2020년 11월까지 증가세가 지속되다가 2020년 말에 다시 하락하였다. 그러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지역집단은 2020년 4분기에 회복세를 유지하였다.

위 결과를 통해, 우리는 야간조명이 코로나19 위기 시기의 경제활동 동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2020년 4월 봉쇄조치가 최고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러시아에서는 1인당 GDP 및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야간조명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2020년 5월부터 8~9월 사이에 관찰되었던 또 한 차례의 감소 이후로, 대부분의 지역은 일시적인 회복 조짐을 보였고 2020년 11월까지 회복세가 지속되었지만, 마지막 12월에 다시 하락하였다. 2020년 8월부터 관측된 야간조명의 증가세는, [그림 2]에서 살펴본 봉쇄조치 완화와도 일치한다. 중요한 사실은, 1인당 GDP 및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지역들만이 2020년 4분기에 꾸준한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 러시아의 지역별 취약 산업 현황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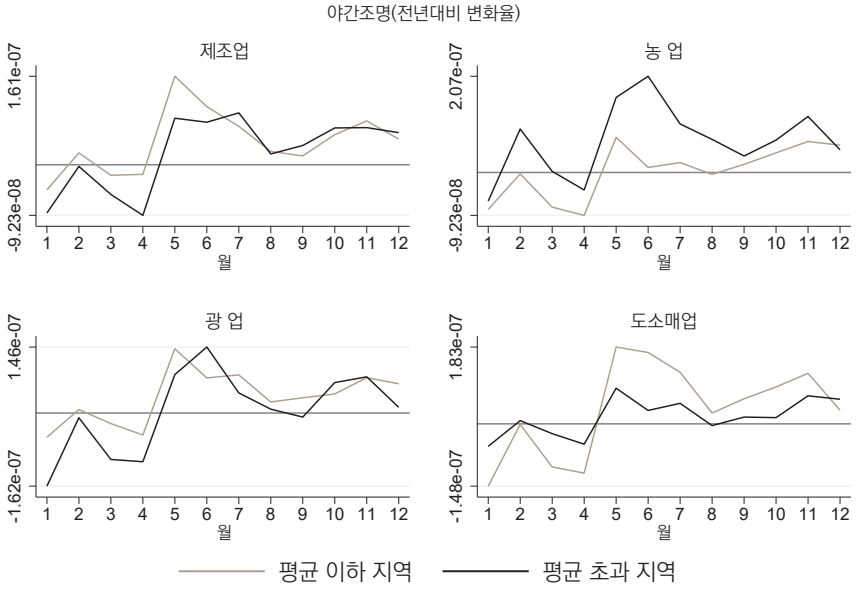
주요 산업

[그림 4]는 러시아 지역 주요 4개 산업(제조업, 농업, 광업, 도소매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2개 지역집단으로 분류한 뒤 집계한 야간조명의 전년대비 변화율을 보여준다. 지역별 시계열 자료는 2019년 인구 비중을 감안하여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제조업 :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지역들은 2020년 봄에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더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두 지역집단에서 나타난 패턴은 2020년 4월에 최고 수준의 봉쇄조치가 시행된 것과 일치하며, 2020년 2분기에는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7월에는 두 지역

[그림 4] 주요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에 따라 분류한 지역별 야간조명 변화율

(단위 : %)



자료 : 콜로라도 광업대학교 부설 페인 공공정책연구소 지구관측그룹의 실시간 위성사진 데이터와 러시아 연방 통계청 자료를 사용하여 필자가 작성.

집단의 야간조명 변화율이 거의 일치하며 2020년 말까지 계속 유사한 동향을 따르고 있다.

농 업 : 농업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코로나19의 영향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2020년 내내 지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지역은 2020년 8월까지는 비교적 동일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활동 수준에서는 두 지역에 차이가 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12월에 이르면 경제활동 변화율에는 서로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광 업 : 광업 부가가치 비중이 낮은 지역들은 2020년 5월까지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였다. 2분기에 야간조명 전년대비 변화율이 정점에 이르렀고, 이후에 두 지역의 경제활동 동향은 대체로 일치하였다.

도소매업 :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전년동월대비 두 지역 모두 경제활동에 두드러진 감소세가 나타났다. 2020년 4월까지 도소매업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코로나19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0년 4월 이후에는 양상이 달라졌다. 도소매업

부가가치 비중이 낮은 지역은 2020년 2분기에 더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두 지역 사이의 야간조명 변화율 차이는 2020년 11월까지 지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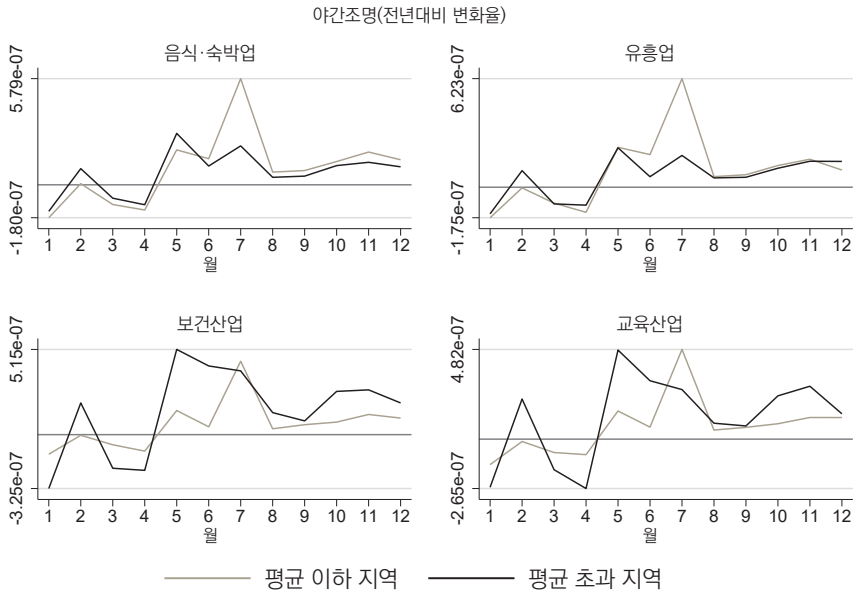
대면 서비스업

[그림 5]는 러시아 지역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4개 산업(음식·숙박업, 유흥업, 보건산업, 교육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2개 지역집단으로 분류한 뒤 집계한 야간조명의 전년대비 변화율을 보여준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림 5]에서 보여주는 산업들은 러시아 경제의 주요 산업이 아니다. 그러나 이 산업들에서 대면 접촉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해당 산업의 경제활동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림 5] 대면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에 따라 분류한 지역집단의 야간조명 변화율

(단위 : %)



자료 : 콜로라도 광업대학교 부설 페인 공공정책연구소 지구관측그룹의 실시간 위성사진 데이터와 러시아 연방 통계청 자료를 사용하여 필자가 작성.

음식·숙박업 : 숙박업소와 음식점은 사업활동의 특성상 직접적인 대인 접촉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해당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야간조명 동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단, 예외적으로 6월부터 8월 사이에는 음식·숙박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낮은 지역에서 야간조명이 눈에 띄게 증가세를 보였다.

유흥업 : 유흥업에서는 2개 지역에서 질적으로 유사한 야간조명 동향이 관측되었다.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두 지역의 야간조명 동향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음식·숙박업의 경우와 유사하게, 유흥업 부가가치 비중이 낮은 지역에서는 2020년 2분기 중반에 야간조명이 많이 증가하였고 2020년 7월에는 야간조명이 연간 최고치에 달했다.

[그림 5]의 음식·숙박업과 유흥업에서 5~8월 사이에 나타난 동향은 앞서 [그림 2]에서 살펴본 러시아의 옥스퍼드 엄격성 지수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코로나19 정책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보건 및 교육산업 : 보건 및 교육산업 부가가치가 높은 지역은 2020년 4월에 도입된 최고 강도의 봉쇄조치에 따라 해당 월의 야간조명이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보건 및 교육산업 비중이 낮은 지역에서 2020년 첫 4개월 동안은 별다르게 눈에 띄는 동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2020년 4~7월 사이에 야간조명이 일시적으로 급증한 이후로도 특이한 동향이 발견되지 않는다.

■ 결 론

위의 [그림 3], [그림 4], [그림 5]에 나타난 모든 결과에는 공통적으로 두 가지 패턴이 나타난다. 첫째,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야간조명으로 측정한 경제활동은 두드러지게 감소했다. 야간조명은 2020년 2분기에 연간 최고 수준에 달했으며, 1인당 GDP와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지역에서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시적인 급증에 뒤이어, 2020년 3분기에는 다시 하락하였고 4분기에는 어느 정도 회복세가 나타났다. 두 번째로, 야간조명은 2020년 8~9월을 기점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회복세가 나타나는 시기는 코로나19 봉쇄조치가 대폭 완화된 시기와 일치한다.

러시아의 지역별 취약 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자는 지역별 특정 산업 부가가치 비중을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2개 지역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제조업, 광업, 보건 및 교육산업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2020년 1분기에 최고 강도의 봉쇄조치가 시행된 이후 경제활동이 더욱 크게 위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농업, 도소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들은 동기간에 야간조명과 관련해 두드러지는 특이한 동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2020년 2분기에 봉쇄조치가 점차 완화되면서 동기간에 야간조명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분석 결과, 이와 같은 일시적 회복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유흥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끝으로 2020년 하반기에는 산업별로 분류한 지역들 간에 야간조명 동향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2020년 8월부터 11월까지 경제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이러한 회복세는 2020년 8월 이후에 코로나19 봉쇄조치가 대폭 완화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은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날씨와 같은 외부 요인들에 대해 설명하려는 시도가 경기동향 추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알 수 없다. 둘째, 필자는 다양한 산업 프로필을 갖춘 여러 지역의 경제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우리가 제시한 지표의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해당 지역의 산업 믹스와 위기의 심각한 수준 및 회복 속도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 야간조명 동향은 단순히 러시아 지역에 존재하는 사회경제적 차이를 나타내는 것일지도 모른다. 관련 데이터가 나오면, 이후에 지역별 사회경제적 차이를 확실하게 통제하면서 노동시장의 다양한 구조들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회복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분석 결과는 신속한 데이터 수집에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야간조명이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른 국가 경제에서도 산업 비중에 따라 지역의 야간조명이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KLI

참고문헌

· Hale, T., N. Angrist, R. Goldszmidt, B. Kira, A. Petherick, T. Phillips, S. Webster, E. Cameron-Blake, L. Hallas, S. Majumdar, and H. Tatlow(2021), "A Global Panel Database of Pandemic Policies(Oxford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 *Nature Human Behaviour*, 5, pp.529-538.

· Henderson, J. V., A. Storeygard, and D. N. Weil(2012), "Measuring Economic Growth From Outer Space", *American Economic Review*, 102(2), pp.994-1028.

국제노동동향

국제노동동향 ① 미국의 단결권 보호법안과 입법 전망

국제노동동향 ② 코로나19와 영국의 통합급여

국제노동동향 ③ 2017년 노동개혁 이후 브라질 노조운동의 시련과 도전

INTERNATIONAL

L A B O R

B R I E F

International Labor Brief 국제노동브리프 | 2021년 6월호 pp.51~58
한국노동연구원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① - 미국

미국의 단결권 보호법안과 입법 전망

박동우 (미국 코넬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 머리말

미국에서 노동조합을 원하는 목소리는 얼마나 되는가? MIT 슬론 경영대학원의 토마스 코칸(Thomas Kochan) 교수 외 3명의 연구에 따르면, 비노조 사업장에서 일하는 미국 노동자의 48%가 노동조합 가입을 희망한다고 밝혔다.[1] 하지만 2020년 미국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미국의 전체 노조 가입률은 10.8%, 민간부문은 6.3%에 불과하다.[2] 이처럼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대변하고 목소리를 내기 원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현실과 제도 간의 괴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 노동법의 체계가 노조 조직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본다. 최근 아마존의 노동조합 대표권 승인 실패가 대표적인 예시라 할 수 있다.[3] 앨라배마주 베서머 물류센터의 조직화를 추진했던 소매·도매·백화점 노동조합(RWDSU)의 발표에 따르면, 아마존은 노조 조직 캠페인 과정에서 유인물 배포, 직원필참회의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반노조 캠페인

1) Kochan, T. A., D. Yang, W. T. Kimball, and E. L. Kelly(2019), "Worker Voice in America : Is There a Gap between What Workers Expect and What They Experience?", *ILR Review*, 72(1), pp. 3~38.
2) Bureau of Labor Statistics(2021), "Economic News Release – Union Members – 2020", https://www.bls.gov/ (검색일 : 2021.5.24).
3) Economic Policy Institute(2021.4.9), "The Amazon Election in Bessemer Showcased Our Broken Union Election System and Why We Must Pass the PRO", https://www.epi.org/ (검색일 : 2021.5.24).

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선거의 주요 과정에 직접 개입하기도 했다.[4] 노동계는 현행 노동법이 기업의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를 제대로 규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조를 조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단결권 보호법안(Protecting Right to Organize Act : 이하 "PRO Act")은 매우 획기적인 법안이다. 단결권 보호법안은 ①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조를 조직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② 사용자가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③ 자유로운 노조선거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사용자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제어하지 않는 현행 노동법 체계를 바로잡음으로써 노사 간의 균형을 맞추는, 이른바 "작업장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가치를 담고 있다. "뉴딜 이래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획기적인 노동정책"이라고 공공연하게 입에 오르내리는 만큼 해당 법안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단결권 보호법안의 내용과 그 전망을 살펴보도록 한다.

■ 단결권 보호법안의 주요 내용

단결권 보호법안은 그 이름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현재 노동법을 개정해서 노조 설립을 이전보다 용이하게 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내용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견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는 노조활동 가담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다.

현재 연방노동관계법(NLRA)에 따르면 친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하지만 최근 구글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5] 미국 사용자들은 이러한 법에 개의치 않고 노조 조직화를 시도한 노동자를 해고할 뿐만 아니라 각종 위협, 보복

4) CNBC(2021.4.19), "Amazon Illegally Interfered in Alabama Warehouse Election, Union Alleges in Complaint to Federal Officials", https://www.cnbc.com/ (검색일 : 2021.5.24).
5) The Guardian(2020.12.2), "Google Broke US Law by Firing Workers Behind Protests, Complaint Says", https://www.theguardian.com/ (검색일 : 2021.5.24).

성 인사조치 등 여러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 왔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에 발생한 전체 노조선거 캠페인 가운데 사용자가 연방법을 위반한 경우는 41.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6] 이렇게 연방법 위반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반노조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노동법하에서 사용자의 책임은 단순히 노동자의 복직 혹은 미지급 임금의 사후 지불에 지나지 않는다.

단결권 보호법안은 이러한 사용자들에게 직접적인 제재를 가한다. 만약 노동자들이 불법해고를 당하거나 노조활동으로 인하여 기타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차후에 회사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로 하여금 연방대법원 소송을 통해 해고 조치를 즉시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리도록 한다. 단결권 보호법안에 따르면 개인은 연방노동관계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용자는 노조선거 과정에 개입할 수 없으며 반노조 캠페인을 위해 노조선거를 지연시킬 수 없다.

현행 연방노동관계법에 따르면 노조 조직화를 위해서는 교섭단위에 속하는 노동자들이 노조를 지지한다는 성명 혹은 카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카드체크 인증방식"이라 부른다. 만약 교섭단위의 과반수가 노조를 지지할 경우 사용자는 "자발적으로" 노조를 교섭대표로 인정하고 최초 단체교섭을 실시할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연방노동관계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표권 승인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는 1935년 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왔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노조 조직 과정에 사용자가 개입할 여지를 많이 남겨 두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용자는 노조에 교섭단위 범위에 관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해소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노동자가 퇴사하거나 지지를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 결과 초기 단계에서 교섭단위 과반수의 지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추후에 지지율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단결권 보호법안은 교섭단위를 설정하는 데 노동자와 연방노동관계위원회만이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개입을 미연에 방지한다. 이에 따라 교섭단위에 대한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각종 분쟁을 제거하고 투표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할 수 있다.

6) Economic Policy Institute(2019.12.11), "Unlawful", https://www.epi.org/ (검색일 : 2021.5.24).

사용자는 직원필참회의를 비롯한 반노조 활동에 노동자의 참석을 강제할 수 없다.

아마존 조직화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용자는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자료, 사내 이메일 등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반노조 메세지를 전달해 왔다. 특히 사용자는 노동자를 직원필참회의에 참석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선전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불참 시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다. 또한 노동자는 경우에 따라 상사와 일대일 면담을 통해 노조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전달받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는 노조활동가의 사업장 내 출입을 금지하여 노동자와 노조 간의 접촉을 줄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친노조 메세지에 비해 반노조 메세지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이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단결권 보호법안은 사용자가 직원필참회의를 비롯한 각종 사내 반노조 활동에 노동자들을 의무적으로 참석시키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자신의 의지에 반해 강제적으로 반노조 메세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사용자로 하여금 사업상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사내 메일을 통한 노조 조직 활동을 허용하도록 명령한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단결권 보호법안은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노동법상 노동자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사용자는 영구적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7] 여기서 영구적 대체인력이란 새로운 노동자 채용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해 파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파업에 참가했던 노동자는 일자리에 복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단결권 보호법안은 영구적 대체인력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파업에 대한 원천봉쇄 효과를 제거한다.[8]

무엇보다도 특별히 주목받는 사안은 독립계약자의 노동자성 인정 방식이다. 단결권 보호법안은 사용자가 임의로 노동자를 독립계약자로 오분류하는 행위를 강하게 규제함으로써,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으나 독립계약자로 분류되어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노동자를 보호한다. 이를 비롯한 기타 내용은 아래 〈표 1〉에서 좀 더 자세히 정리한다.

7) 다만 이는 경제적 파업(예, 단체협약 체결, 단체교섭 결렬에 따르는 파업)에만 해당된다. 부당노동행위(예,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파업의 경우 노동자는 파업 종료 후 복귀할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영구적 대체인력을 채용했다면, 그들을 해고해서라도 파업 참가자를 복귀시켜야 한다.

8) 한국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파업 중 사용자는 내부적으로 인력을 대체할 수는 있지만 신규 채용 및 외부 대체는 할 수 없다.

<표 1> 현재 노동법의 문제와 단결권 보호법안의 해결 방안

현재 노동법의 문제	단결권 보호법안의 해결 방안
사용자는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에 제소함으로써 노조 대표권 승인 투표 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	노동자와 연방노동관계위원회가 노조 대표권 승인 투표 절차를 설정한다. 이에 사용자는 개입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노동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직원필참회의를 개최하여 일방적으로 반노조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다.	사용자는 직원필참회의에 노동자의 참석을 강제할 수 없다.
현행 노동법하에서는 노동자가 동료 노동자와 함께 임금 및 노동조건 향상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불법 해고되었을 경우, 복직 및 미지급 임금을 다시 수령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적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을 기다리게 된다. 연방노동관계법(NLRA)에 이러한 불법 해고는 금지되어 있으나 여전히 사용자는 보복성 인사조치를 단행해 왔다.	만약 노동자의 노조 조직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보복성 인사조치가 확인될 경우, 연방노동관계위원회는 법원을 통해 이러한 조치를 즉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사용자는 연방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하더라도 민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	사용자가 연방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경우 민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 임원에게도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노동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연방노동관계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금지된다.	노동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용자는 고용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집단소송 포기 및 강제중재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집단소송 포기 및 강제중재는 금지된다.
현행 연방노동관계법은 독립계약자의 범위를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연방노동관계법에 저촉되지 않고도 노동자를 독립계약자로 분류할 수 있다.	단결권 보호법안은 이러한 분류를 연방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간주한다. 노동자와 독립계약자를 분류하는 절차에서 사용자는 이른바 "ABC 기준"[9]을 적용해야 한다. 이 기준은 노동자가 독립계약자로 오분류되지 않도록 하는 엄격한 법적 기준이다.
복수의 사용자가 단체교섭 의무 없이 용역이나 하청계약으로 노동자의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단결권 보호법안은 공동 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기준을 제시한다.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통제하는 모든 기업이 사실상의 사용자로 간주되며 따라서 이들 기업에 단체교섭의 의무가 발생한다.
미국의 일부 주는 "단결강제금지법(Right to Work Act)"을 도입하고 있다. 이 법은 노조가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공정분담금(fair share fee)을 납부받을 권리를 제한한다.	주정부는 사용자와 노조가 공정분담금 합의(fair share agreement)에 이르도록 허용해야 한다.
사용자는 최초 단체협약 체결로 이어지는 교섭 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	단결권 보호법안은 사용자로 하여금 노조가 조직되었을 경우 최초 단체협약 체결 절차, 즉 조정이나 필요한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재 등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노동자의 기본적인 파업권이 상당 부분 제한된다.	단결권 보호법안은 사용자가 파업에 대응하여 영구적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없도록 하고, 직장 폐쇄도 금지한다. 또한 직접 사용자가 아닌 다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간접 파업(secondary strike)에 대한 금지도 제거한다.

자료 : Economic Policy Institute(2021.2.4), "How the PRO Act Restores Workers' Right to Unionize", https://www.epi.org/ (검색일 : 2021.5.24).

9) 편집자 주 : 기업이 ABC 기준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입증하지 못하는 한 노동자를 임금노동자로 추정한다. (A) 노동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상으로나 실제로 기업의 통제와 지시를 받지 않는다. (B) 노동자는 기업의 통상적인 사업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한다. (C) 노동자는 관례적으로 기업과 독립적으로 설립된 직종,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한다.

■ 단결권 보호법안의 통과 가능성

주지하다시피, 상원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저지하고 법안을 처리하려면 상원의원 총 100명 중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설령 민주당이 단결권 보호법안을 만장일치로 찬성한다 하더라도 공화당에서 최소 10명의 이탈자가 나와야 한다. 2020년 초에도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적이 있지만, 당시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던 상원의 벽을 넘는 데에는 실패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공공연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밝혔기 때문에 설령 상원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입법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노조들과 견고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현시점에서 최소한 대통령의 의중은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균형은 50 대 50으로 팽팽하다. 현재 백악관은 법안의 통과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인프라 투자법안(Infrastructure Bill)에 단결권 보호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고속도로, 교량 건설을 비롯한 각 지역의 낙후된 기반시설의 재건을 위해서는 이른바 노조가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전략은 민주당-공화당 간의 증세 및 인프라 투자 규모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국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인프라 보수 및 개선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공화당 지도자들에게는 유인책이 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신은 이러한 전략이 결과적으로 워싱턴에 있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압박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10)]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거대 노동조합 역시 법안 통과에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미국노동총연맹-산별조합회의(AFL-CIO)는 TV 및 라디오 광고에 백만 달러 이상을 사용하며 홍보에 가세하고 있다. 특히 이 광고는 애리조나,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주에 송출될 예정인데, 소위 중도파 민주당원으로 분류되는 해당 주 상원의원들[11)]이 아직 본격적인 지지 성명

10) Politico(2021.5.21), “Biden’s Bank Shot to Win GOP Support for His Infrastructure Bill”, https://www.politico.com/ (검색일 : 2021.5.24).
11) 애리조나의 마크 캘리(Mark Kelly), 커스턴 시네마(Kyrsten Sinema) 그리고 버지니아의 마크 와너(Mark Warner)가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12)13)] 이와 더불어 국제페인터산업연맹노조(IUPAT)를 비롯한 노조 역시 만약 상원에서 민주당이 단결권 보호법안을 지지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2022년 선거에서 지지는 없을 것이라는 완고한 입장을 다수당 원내대표 척 슈머(Chuck Schmer)를 비롯한 의원들에게 전했다. 이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민주당 상원의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민주당의 대표적인 중도 우파로 분류되던 조 맨친(Joe Manchin)은 최근 법안 지지 대열에 동참했다.[14)]

하지만 이에 대한 재계의 대응도 만만치 않은데, 특히 플랫폼 기업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버 기사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독립계약자 혹은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분류되는 순간 자동적으로 단결권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적 보호를 받게 됨으로써, 기업은 사용자로서의 제반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5월 6일의 한 기사에 따르면[15)], 차량공유 업체 우버(Uber), 리프트(Lyft) 그리고 배달앱 업체인 도어대쉬(Doordash)와 인스타카트(Instacart)는 현재 32명의 로비스트에게 최소 119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며 상원에 로비를 벌이고 있다. 특히 우버는 2021년 1분기에만 54만 달러를 사용하며 단결권 보호법안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 기반 경제에 적용되는 정책에 관하여 로비를 펼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5월 23일 현재, 상원에서는 47명(45명의 민주당 의원, 두 명의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이 단결권 보호법안에 지지 선언을 했다. 이에 남은 민주당 상원의원의 행보가 단결권 보호법안의 통과 여부에 핵심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2) Huffpost(2021.4.28), “Organized Labor Puts Heat on Democratic Holdouts to Support PRO Act”, https://www.huffpost.com/ (검색일 : 2021.5.24).
13) Politico(2021.4.22), “Unions warn Senate Democrats : Pass the PRO Act, or Else”, https://www.politico.com/ (검색일 : 2021.5.24).
14) Wall Street Journal(2021.5.20), “Biden’s Big Labor Bind”, https://www.wsj.com/ (검색일 : 2021.5.24).
15) The Intercept(2021.5.6), “Opposing PRO Act, Uber and Other Gig Companies Spend Over $1 Million Lobbying Congress”, https://theintercept.com/ (검색일 : 2021.5.24).

■ 맺음말

노동법 개혁은 미국 노동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비록 바이든 정부가 적극적인 친노동 기조를 보이고 거대 노동조합들이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해 로비를 벌이고 있으나 공화당과 재계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다. 특히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지지를 얻을 전략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치의 본질인 설득, 양보 그리고 타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설령 단결권 보호법안이 바이든 정부의 임기 내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법안 내용 그대로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그 경우 과연 단결권 보호법안의 의도대로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백악관과 민주당이 단순히 단결권 보호법안의 통과에 몰두하기보다는 점진적인 법 개정을 통해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 목표에 집중한다면 전망은 밝으리라 생각된다. KLI

International Labor Brief 국제노동브리프 | 2021년 6월호 pp.59~67
한국노동연구원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영국

코로나19와 영국의 통합급여

채민석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 경제학 박사과정)

■ 머리말

코로나19 확산 및 봉쇄정책의 지속으로 많은 사람이 소득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되자, 이들을 돕기 위해 영국 정부는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일부 보전[1)]해 주는 등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하였는데, 이 글에서는 영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통합급여(Universal Credit)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통합급여를 간단히 소개하고, 최근 수급자 수 추이를 살펴본다. 이어서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통합급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한다.

■ 통합급여 소개 및 최근 수급자 수 추이

2013년 도입된 통합급여는 실업부조 성격의 소득기반 구직자급여(JSA)를 비롯하여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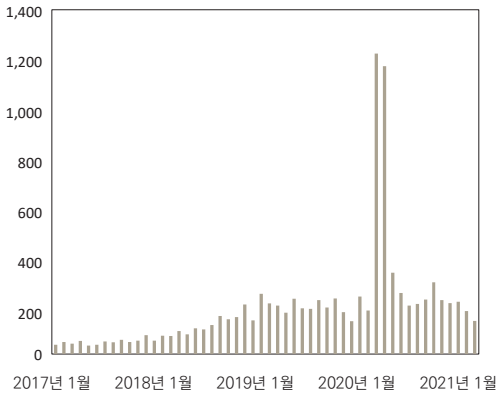
1) 코로나바이러스 고용유지 정책(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은 강제휴직 노동자(furloughed worker)에게 임금의 80%를 최대 월 2,500파운드(약 380만 원)까지 지급하며, 자영업자 지원계획(Self-Employment Support Scheme)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3개월 단위로 소득의 80%를 최대 7,500파운드(약 1,14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보조, 소득기반 고용지원급여(ESA), 주거급여, 아동세액공제, 근로세액공제 등 총 6개 혜택을 통합해 대체[2]하는, 영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이다.

통합급여 수급자격[3]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요건과 재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본요건을 보면, ① 18세 이상~국민연금 수급 연령[4] 이하이고, ② 학생이 아니어야 하며,[5] ③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혹은 웨일스에 거주 중이고, ④ 수급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을 수행하겠다는 서약에 동의해야 한다. 또한, 재정요건에 따르면 본인 및 배우자의 총저축액[6]이 1만 6천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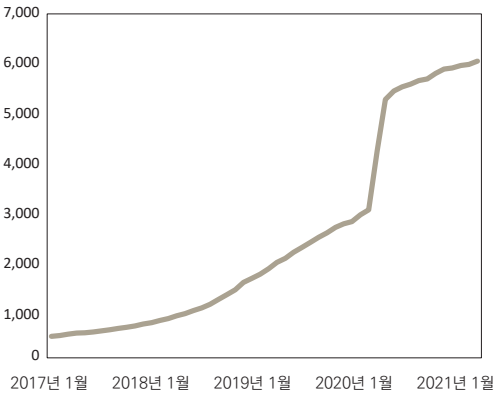
[그림 1] 통합급여 신규 수급자 수

(단위 : 천 명)



[그림 2] 통합급여 총 수급자 수

(단위 : 천 명)



자료 :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Benefits statistics(Stat-Xplore)", https://stat-xplore.dwp.gov.uk/ (검색일 : 2021.5.24).

2) 기존 급여를 신규 신청할 수는 없지만, 통합급여로 대체되기 이전부터 급여를 수급해 온 사람은 수급조건을 유지하는 한 계속 수급할 수 있다(Advice for Decision Making : Staff Guide E1003조, E1004조).
3) Welfare Reform Act 2012 제3조, 제4조, 제5조, 제14조와 The Universal Credit Regulations 2013 제8조 1항, 제14조, 제18조 1항 등을 참고하였다.
4) 현재는 66세이고 2044~46년에는 68세로 상향될 예정이나, 이 시한을 2037~39년으로 앞당기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Gov.UK News Story(2017.7.19), "Proposed New Timetable for State Pension Age Increases")
5) 단,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일을 할 수 없거나 보육 의무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16~17세 이하이거나 학생이어도 수급이 가능하다.
6) 법에는 capital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거주 중인 집, 영업재산 등 대부분의 자산을 제외(The Universal Credit Regulations 2013 제48조 및 별표 10)하기 때문에 저축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다.

운드(약 2,4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에 비례하여 수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급액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을 정도로 소득이 낮아야 한다.

이와 같은 통합급여 수급자 수의 최근 추이를 보면, 1차 봉쇄정책이 시행된 직후인 2020년 4월 및 5월 신규 수급자 수는 각각 122만 2천 명 및 117만 1천 명으로 2019년 월평균(19만 6천 명)의 6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총 수급자 수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2021년 4월 기준 603만 9천 명으로 봉쇄정책 시행 전인 2020년 2월(291만 6천 명) 대비 107.1% 증가했다.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통합급여의 변화[7)]

수급액의 일시적 인상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통합급여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수급액이 일률적으로 주당 약 20파운드(약 3만 원) 인상되었다는 것이다. 2020년 3월 20일 리시 수낙(Rishi Sunak) 재무장관은 향후 1년간 통합급여의 수급액을 연 1,040파운드 인상한다고 발표[8)]하였고, 이후 2021년 3월에는 이를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9)] 이에 따라 2021년 5월 현재 월 기본수급 가능액[10)]은 25세 이하 개인의 경우 344파운드(약 52만 원), 25세 이상 개인의 경우 411.51파운드(약 62만 원)이다.

한편, 예산책임처(OBR)는 통합급여 수급액 인상으로 인해 2020/21 회계연도 중에만 46

7)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Hobson, F.(2021), *Coronavirus : Withdrawing Crisis Social Security Measures*, House of Commons Library, Briefing Paper No.8973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8) Gov.UK Speech(2020.3.20), "The Chancellor Rishi Sunak Provides an Updated Statement on Coronavirus". 이하 각주에서 출처 링크나 검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각주7)에 명시된 보고서의 각주 표기를 따른 것이다.
9) Gov.UK News Story(2021.3.3), "Budget 2021 : What You Need to Know".
10)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자녀 혹은 돌봐야 할 장애인이 있거나,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수급 가능액이 늘어난다. 또한 이하에서 설명하듯이, 최종 수급액은 수급 가능액에서 근로소득 등을 차감하여 결정된다.

<표 1> 개인 상황별 월 통합급여 수급 가능액

기 본	25세 이하 개인	344파운드
	25세 이상 개인	411.51파운드
	커플이 모두 25세 이하	490.60파운드/2인
	커플이 모두 25세 이상	596.58파운드/2인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수급액	1자녀	282.50파운드(2017.4.6이전 출생자) 237.08파운드(2017.4.6이후 출생자)
	2자녀 이상	237.08파운드/1인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나 재취업 활동이 어려울 경우 추가 수급액		343.63파운드
장애 관련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주 35시간 이상 돌봐야 할 경우 추가 수급액		163.73파운드

자료 :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Universal Credit", https://www.gov.uk/ (검색일 : 2021.5.24).

억 파운드(약 6조 9천억 원)가 소요될 것이라 추정했고,[11] 재무부는 통합급여 수급액 인상이 6개월 연장됨에 따라 2021/22 회계연도 중에도 22억 4천만 파운드(약 3조 3,600억 원)가 필요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12]

이와 같이 막대한 소요 비용에도 불구하고 통합급여 수급액 인상이 연장된 것은 그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매우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통합급여 수급액 인상 이후 30만 명 이상의 통합급여 수급을 지원한 씨티즌스 어드바이스(Citizens Advice)[13]는 그들이 도와준 이들 중 기본적인 생필품 구매 여력이 없는 사람의 비율이 43%로, 통합급여 수급액이 인상되지 않았다면 이 비율이 75%까지 높아졌을 것이라며 정부의 팬데믹 정책 중 가장 성공적이라고 칭찬했다.[14] 또한, 재정연구소(Institute for Fiscal Studies)는 통합급여 수급액 인상으로 인해 소득 하위 10%의 소득은 5% 증가한 반면, 상위 계층들에 대한 영향은 매우 작았다면서 명백히 진보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15] 싱크탱크 레졸루션 파운데이션(Resolution Foundation)

11)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2020), *2020 Economic and Fiscal Outlook-November 2020*.
12) HM Treasury(2021), *Budget 2021 : Protecting The Jobs and Livelihoods of the British People*.
13) 법률, 부채, 소비 및 주거 관련 상담을 도와주는 자선단체.
14) Citizens Advice(2021.1), "The Chancellor has an Important Decision to Make - He must Keep the Lifeline".
15) IFS(2020.10), "IFS Green Budget 2020 : Chapter 8 : The Temporary Benefit Increases Beyond 2020-21".

도 통합급여 수급액 인상이 연장되지 않으면 소득 최하위 가구의 소득이 7%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16] 이에 따라 하원 재무위원회와 노동 및 연금위원회 등은 2020년 9월부터 통합급여 수급액 인상을 연장할 것을 주장했으며,[17][18] 자선단체 조셉 라운트리 재단(Joseph Rowntree Foundation)도 수십여 개의 사회운동단체, 자선단체 및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통합급여 수급액 인상의 연장을 정부에 거듭 촉구해 왔다.[19][20]

반면, 일각에서는 통합급여 수급액 인상이 영구화되는 것을 우려하는데, 경제문제연구소(Institute of Economic Affairs)는 보편적 복지혜택 확대에 따른 세수 낭비는 추후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저소득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21] 또한 정책연구센터(Centre for Policy Studies)는 통합급여 수급액 인상을 일시적인 코로나 지원금으로 대체하고, 이를 통해 절약된 예산은 통합급여 수급액 산출 시 차감되는 근로소득 비율을 줄이는 데 사용함으로써 근로 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22] 그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은 통합급여 수급액을 영구적으로 인상하는 비용 문제에 대한 우려를 보도하기도 하였다.[23]

16) Resolution Foundation(2020.10), “Safe Harbour? Six Key Welfare Policy Decisions to Navigate this Winter”.
17) Treasury Committee(2020.9.11), “Eighth Report : Economic Impact Of Coronavirus : the Challenges of Recovery”.
18) Work and Pensions Committee(2020.10.14), ”Universal Credit : the Wait for a First Payment”.
19) Joseph Rowntree Foundation(2020.9.30), “Joint Open Letter to The Chancellor - Keep the Lifeline”.
20) Joseph Rowntree Foundation(2020.11.29), “Coalition Warns it would be a Terrible Mistake to Cut the £20 Uplift to Universal Credit”.
21) Institute for Economic Affairs(2021.1.17), “Any Extension of the Universal Credit Uplift should not be made Permanent, Says IEA Expert”.
22) Heywood, J.(2021), “The Universal Credit Uplift : The Way Forward”, Centre for Policy Studies, 24 January.
23) Payne, S.(2021), “Boris Johnson Faces Anger from Tory MPs over Planned Welfare Benefit Cut”, *Financial Times*, 18 January.

재취업 활동 요건[24] 의 일시적 면제

통합급여 수급 중에는 특별한 사정[25]이 없는 한 재취업 활동, 즉 ① 수급자의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적절한 일자리 등을 알아보기 위한 인터뷰 참석, ② 교육 및 고용 프로그램 참여, 업무 및 직업 연수 경험, 사업계획 개발 등 재취업 준비, ③ 지원서 제출, 온라인 프로필 작성, 직업소개소 등록 및 가능한 모든 구직활동, ④ 언제든 취업할 수 있는 의지 및 상태 유지 등이 요구된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항에 따라 네 가지 단계별 제재[26]를 받게 되어 7~91일[27]까지 수급액이 감소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제재가 반복될 경우 추가 제재기간이 최대 182일까지 늘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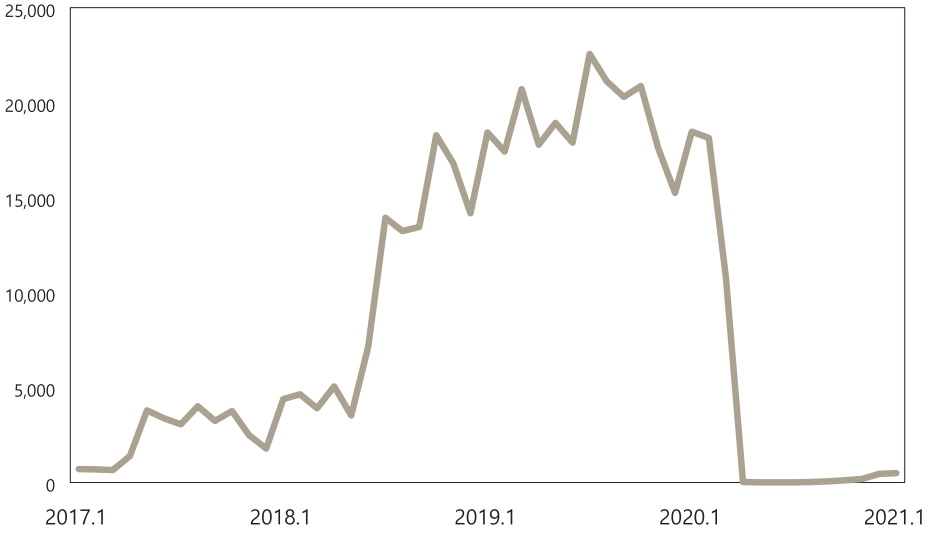
그런데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봉쇄정책이 시행되면서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충족하기가 어려워지고, 무엇보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로 재취업 관련 인터뷰 등이 이루어지는 고용지원센터(Jobcentre Plus)가 정상 운영되지 못했다. 이에 영국 정부는 2020년 3월 말부터 재취업 관련 인터뷰를 연기하고 위에서 언급한 재취업 활동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제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28]

이후 2020년 6월 말 테레스 코피(Thérèse Coffey) 노동연금부 장관은 고용지원센터의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으나,[29] 이는 매우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2021년 4월 12일에 이르러서야 운영시간이 팬데믹 이전으로 복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대면 서비스만 재개될 수 있었

24) 재취업 활동 요건 및 관련 제재와 관련해서는 Welfare Reform Act 2012 제13조 제2항, 제26조, 제27조 및 The Universal Credit Regulations 2013 제101조~제105조 등을 참고하였다.
25)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나 보육 의무 등으로 인해 구직활동이나 일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말한다.
26) 재취업 관련 인터뷰 불참, 재취업 준비 관련 요구사항 불이행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의 경우 낮은 단계의 제재를, 직장 탐색 불이행, 취업 가능 상태 미유지 등의 경우는 중간 단계의 제재를, 재취업 활동 중 제안받은 직업 연수나 일자리에 지원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높은 단계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재취업 관련 인터뷰 참석만 요구되는 수급자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실업의 이유가 자발적이거나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일 경우에도 높은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된다.
27) 낮은 수준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우선 제재 사유가 해소된 후 추가 제재기간(일정 기간 내 처음인 경우 7일)까지 지나야 제재가 해소되며, 최저 수준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제재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만 제재가 지속된다.
28) The Social Security(Coronavirus) (Further Measures) Regulations 2020.
29) House of Commons Debate(2020.6.29), https://hansard.parliament.uk/

[그림 3] 통합급여 수급자에 대한 제재 건수 추이

(단위 : 건)



자료 :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Benefit Sanctions Statistics to January 2021",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benefit-sanctions-statistics-to-january-2021-experimental (검색일 : 2021.5.24).

다.[30] 또한 노동연금부는 재취업 활동 요구가 코로나19 및 수급자 개인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재개되고,[31] 재취업 활동과 관련한 제재도 그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32]

이에 따라 통합급여 수급자에 대한 제재는 최근까지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림 3]을 보면 통합급여 수급자에 대한 제재 건수는 2019년 중 월평균 1만 9천 건 수준이었으나, 2020년 4월부터 급감하여 사실상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2020년 하반기부터 제재 건수가 늘고 있으나, 2021년 1월 중 제재 건수는 489건으로 2019년 중 월평균의 2.6% 수준에 불과하다.

30) Gov.UK Press Release(2021.3.19), "Normal jobcentre opening hours resume from 12 April".
31) Question for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2020.7.2), https://questions-statements.parliament.uk/
32) House of Commons Debate(2020.10.19), https://hansard.parliament.uk/

한편, 2021년 1월 봉쇄정책이 재시행됨에 따라 공공 및 상업서비스 노조(Public and Commercial Services Union)는 재취업 활동 요구 및 관련 제재를 다시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33]하였으나, 노동연금부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34]

자영업자 소득조건의 일시적 완화

통합급여 수급액은 앞서 살펴본 〈표 1〉의 개인 상황별 수급 가능액에서 근로소득의 63%[35]와 각종 복지수당 및 퇴직연금 등 비근로소득 전액, 그리고 저축액으로부터의 이자소득[36] 등을 차감하여 결정된다. 이때 근로소득 산출에 있어 "이윤 목적의 자영업"으로 분류[37]되는 경우에는 항상 최저소득 하한[38]만큼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39]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및 봉쇄정책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감안하여, 2020년 3월 20일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최저소득 하한의 적용을 3개월간 연기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이 실제 소득에 따라 통합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40] 이 정책은 이후 몇 차례 연장되어 현재로서는 2021년 7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나, 테레스 코피 장관은 최저소득 하한

33) Public and Commercial Services Union(2021.1.6), "Covid Update - PCS Demands Response from DWP", https://www.pcs.org.uk/
34) Question for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2021.1.11), https://questions-statements.parliament.uk/
35) 단, 돌봐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일정 금액까지의 근로소득을 차감하지 않는데, 주거비용 보조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월 515파운드(약 77만 원)까지, 주거비용 보조를 받는 경우에는 월 293파운드(한화 약 44만 원)까지 차감하지 않는다.
36) 6천 파운드(약 900만 원) 이상~1만 6천 파운드(약 2,40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 250파운드(한화 약 38만 원)당 월 4.35파운드(약 6,500원)를 이자소득으로 계산한다.
37) ① 자영업자로 사업 또는 전문직업에 종사하고, ② 그 일에서 비롯된 소득이 법적으로 자영업자 소득(self-employed earnings)이며, ③ 그 일이 정기적이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윤 목적의 자영업으로 분류된다.
38) "시간당 최저임금×기대시간(expected hours)"으로 산출되며, 여기서 기대시간이란 일반적으로 35시간이나, 보육의 의무가 있는 경우 등은 좀 더 적다.
39) Welfare Reform Act 2012 제8조 제3항과 The Universal Credit Regulations 2013 제22조, 제62조, 제64조, 제66조, 제72조 제1항, 제88조 및 제90조 제2항 등을 참고하였다.
40) Gov.UK Speech(2020.3.20), "The Chancellor Rishi Sunak provides an Updated Statement on Coronavirus".

의 적용이 일시에 재개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41] 이와 관련하여 재무부는 2021/22 회계연도부터 3년에 걸쳐 총 9천만 파운드(약 1,35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42]

기타

한편, 통합급여 수급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가석방 중인 재소자도 통합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2021년 9월까지 지속될 예정이다.[43] 또한, 2020년 4월 3일부터 3개월간은 행정 실수 등으로 과지급된 통합급여 회수를 중지하기도 하였다.[44]

■ 맺음말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저소득계층에 특히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이들에게 충분한 사회보장이 제공되고 있는지, 제도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KLI

41) Thérèse Coffey(2021.2.3), "Work and Pensions Committee - Oral Evidence : DWP's Response to the Coronavirus Outbreak".
42) HM Treasury(2021), *Budget 2021 : Protecting The Jobs and Livelihoods of the British People*.
43) The Social Security(Coronavirus) (Prisoners) Regulations 2020 및 The Social Security(Coronavirus) (Miscellaneous Amendments) Regulations 2021.
44) Gov.UK Press Release(2020.4.3),"Recovery of Benefit Overpayment Suspended".

International Labor Brief 국제노동브리프 | 2021년 6월호 pp.68~75
한국노동연구원

2017년 노동개혁 이후 브라질 노조운동의 시련과 도전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브라질

김경란 (브라질 캄피나스 주립대학교(Unicamp) 사회경제와 노동 박사과정)

■ 머리말

2017년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을 이양받은 테메르 우파 정부는 노사관계 현대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동개혁(Reforma Trabalhista, Lei 13.467)을 단행했다. 노동개혁은 단체교섭 제도 개편과 해고 규제 완화, 노조세 폐지, 비정규 고용 합법화 등을 포함했는데, 이로 인해 1943년 이후 개별 및 집단 노사관계를 규율해 왔던 100여 개 조항이 개악되었다. 노동개혁에 의해 시행된 조치는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고 단체교섭의 약화를 가져왔는데, 그중에서도 노조세 폐지는 노조운동에 엄청난 타격을 입혀 노조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였다. 수십 년 동안 노조 재정을 뒷받침해 왔던 노조세가 폐지되자 노총의 인적·물적 자원이 파괴됐고 많은 노조가 해산됐다. 해고와 노동조건에 대한 개별협상의 가능성도 열려 단체교섭이 분권화되고 노조 영향력이 크게 약해졌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18년에 비해 2019년 단체교섭 건수가 약 2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 이와 함께 노동시장에서는 아웃소싱이나 간헐적 노동과 같은 비정규 고용이 증가하면서 고용 불안정성이 훨씬 커졌다. 이 글에서는 노동개혁 이후 브라질 노조운동이 직면한 문제를 살펴보고, 노조운동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강구 중인 주요 대책도 함께 알아보도록 한다.

1) NEXO(2019.11.5), "Acordo coletivo : como ficou 2 anos após reforma trabalhista", https://www.nexojornal.com.br/ (검색일 : 2021.5.24).

■ 노조운동의 시련

노조세 폐지와 재정 위기

브라질 노조는 오랫동안 노조세, 보조기여금, 연맹기여금, 노조 가입자의 월회비 등 네 가지 형태의 수입에 의존해 활동해 왔다. 그중 노조세는 1940년대 이후 국가가 노동조합을 통제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 중 하나로 노조 재정의 근간이었다. 통합노동법 제579-580조에 따라, 정부는 모든 노동자로부터 매년 하루치 임금을 강제 징수하여 시단위 노조에 60%, 주단위 산별연합에 15%, 전국단위 산별연맹에 5%, 노총에 10%를 배분하고 나머지 10%는 노동부가 근로감독 및 행정 집행을 위해 사용해 왔다. 주단위 산별연합은 노조세 외에 노동법 제513조에 따라 단체교섭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보조기여금을 받았으며, 전국단위 산별연맹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소속 조합원으로부터 조직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연맹기여금을 걷기도 했지만, 둘 다 노조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다. 전적으로 노조세에 의지해 조직을 운영해 왔던 노총 조직은 룰라 정부하에서 법률 11.648이 제정되어 2008년 이후부터 가입 노조 수에 따라 노조세를 배분받았다.[2)]

그러나 2017년 노동개혁 이후 노조세가 폐지되고 월급에서 자동 공제되던 연맹기여금은 노동자 개인의 동의와 승인이 있어야만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면서 대다수 노조는 "죽음에 가까운 타격"을 입었다.[3)] 실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걷은 노조세를 분석한 결과 약 96.4%가 감소했다. 가장 많은 노조세를 받았던 브라질 노총(이하 "CUT")도 2017년에 6,620만 헤알을 받았지만, 2019년에는 44만 2천 헤알을 받는 데 그쳤다.[4)] 이러한 현실 앞에서 많은 조직이 노조 상근인력을 줄이고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2) 2002년 말 노동자당(PT) 소속이자 금속 노동자 출신인 룰라가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 시기 경제 호황을 바탕으로 실업률 감소,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장 확대 및 정규 고용 등이 진행되었다. 또한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체교섭과 파업이 증가했고, 2008년에는 브라질 노총(CUT)을 포함한 6개의 총연맹(CUT, UGT, Força Sindical, CTB, NCST, CSB)도 합법화되어 노조세를 받았다.

3) Dal Rosso S.(2019), "Contribuição de associação ou imposto sindical O sindicalismo no olho do furacão", 16º Encontro Nacional da ABET, UFBA, SALVADOR(BA).

4) PODER360(2020.1.29), "Imposto sindical cai 96% em 2 anos, de R$ 3,64 bilhões para R$ 128,3 milhões", https://www.poder360.com.br/ (검색일 : 2021.5.23).

자구책을 찾았다. CUT는 23년간 사용해 왔던 상파울루주 본부 건물 매각을 결정했으며, 본부 상근자 178명 중 65명을 해고했다.[5] 제2 노총인 폴싸 신지까우(Força Sindical)도 상파울루시에 있는 12층 본사 건물을 매각하고 노조 상근인력을 줄였으며, 노동자총연맹(União Geral dos Trabalhadores : 이하 "UGT")은 노조 상근자를 줄이고 남아 있는 인원에 대해 6개월 동안 노동시간 단축과 급여 삭감을 시행했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개혁 이후 1년이 지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는데, 노동조합들은 뚜렷한 대안을 갖지 못했던 터라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2000년대 이후 10여 년 동안 노동자당(PT) 정부하에서 노총 조직이 합법화되는 등 상대적으로 안정된 기반 위에서 활동을 벌여왔던 노조들의 인적·물적 약화는 불가피했고, 산별연합·연맹의 활동은 위축됐으며 정부 재정에 기대어 간판만 유지하던 노조들은 해산했다.

노조 조직률 감소

노동개혁 이후 노조운동이 직면한 문제는 비단 재정 위기만이 아니다. 2017년 이후 노조 조직률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노조운동이 대표성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조직률 감소 추세는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표 1〉을 보면 2012년 조직률은 16.1%였으나 2019년에는 11.2%로 4.9%p가 감소했다. 8년여 기간 동안 약 380만 명의 조합원이 이탈했으며 이 중 약 250만 명이 2017년 노동개혁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6]

브라질 국립통계원(IBGE)은 2014년 이래로 조합원 수가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급격한 하락은 2017년 이후에 나타났다며, 조직률 감소의 원인으로 노동개혁을 꼽았다. 노조활동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면서 문을 닫는 노조가 늘어나고 신규 노조 결성도 100여 개(2018년)에 그쳐 조직률 감소가 두드러진 것이다.[7] 아웃소싱 전면 확대나 간헐적 고용 합법화와 같은 고용구조 변화도 조직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개혁 이전에는 주로 법원 판례(A Súmula

5) Agência Caneta(2010.11.21), "Sem imposto sindical, CUT vende prédio e demite sindicalistas para sobreviver", http://www.caneta.org/ (검색일 : 2021.5.23).
6) IBGE(2020.8.26), "Taxa de sindicalização cai a 11,2% em 2019, influenciada pelo setor público", https://agenciadenoticias.ibge.gov.br/ (검색일 : 2021.5.24).
7) G1(2020.8.26), "Brasil perdeu 21,7% dos trabalhadores sindicalizados após a reforma trabalhista, diz IBGE", https://g1.globo.com/ (검색일 : 2021.5.24).

<표 1> 노조 조직률 추이

(단위 : 천 명,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취업자 수	89,233	90,715	91,945	92,163	90,776	91,073	92,333	94,642
조합원 수	14,403	14,615	14,592	15,576	13,502	13,070	11,518	10,567
조직률	16.1	16.1	15.9	15.8	14.9	14.4	12.5	11.2

자료 : IBGE(2020.8.26), "Em 2019, mesmo com expansao da ocupacao, sindicalizacao segue em queda no Brasil", https://agenciadenoticias.ibge.gov.br/ (검색일 : 2021.5.24).

<표 2> 노동개혁 전후의 비정규 고용형태

비정규 고용	노동개혁 이전	노동개혁 이후
아웃소싱	기업의 목적 활동 아웃소싱 금지	- 기업의 목적 활동까지 아웃소싱 허용 - 고용, 급여, 작업 지휘권은 하청회사 책임 - 안전·위생 등 보장은 원청 회사 책임 의무화 - 연말보너스, 휴가, 퇴직금, 사회보장 등 적용 - 정규직 노동자 대체 금지 및 해고 후 18개월까지 아웃소싱 노동자 채용 금지
간헐적 고용	법률 규정 없음	- 노동법에 명시 - 노동법 일부 조항 적용
파트타임	주당 최대 25시간 근무, 초과노동 금지	- 주당 최대 30 시간까지 근무, 초과노동 금지 - 주당 26시간 또는 26시간 미만일 경우 최대 6시간 초과노동 허용

자료 : Soares, L. F.(2018), "A REFORMA TRABALHISTA E A TERCEIRIZACAO : realidade e polemica do tema", http://repositorio.aee.edu.br/ (검색일 : 2021.5.17).

no 331)에 의존해 아웃소싱 허용이 청소와 경비 등 기업의 수단 활동에 국한됐으나 아웃소싱법(A Lei Nº 13.429/201)이 제정되면서 기업의 목적 활동에서도 아웃소싱 활용이 가능해졌다. 무분별한 아웃소싱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정규직 대체 금지 등 일부 조항을 두었지만, 비용 절감과 인력 활용 유연화를 꾀하는 기업들이 기존 업무를 아웃소싱으로 대체하는 흐름을 막지는 못하였다. 통계에 의하면, 2006년 737만 명(7.3%)에 불과했던 아웃소싱 규모가 2018년에는 1,190만 명(11.9%)으로 약 1.5배 증가했다.[8] 이와 함께 기업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간헐적 고용도 증가했으며, 특히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에는 신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간헐적 노동으로 채워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노동시장 고용구조 다변화

8) Rodrigues, F. D., Santos, J. M., and Silva, P. S.(2020), "Perfil Dos Trabalhadores Terceirizados No Brasil1" *Revista da ABET*, 19(1), pp.163-184.

가 정규직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면서, 노조운동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 노조운동의 도전과 전망

노동개혁 이후 노조운동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대략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노조 통합 등을 앞세우는 연대 전략, 둘째, 복수노조 도입 등 노조 모델 전환 전략, 셋째, 비정규 조직화에 중심을 둔 새로운 노조주의 전략이다.

노조 통합과 연대 전략

노조 통합과 조직 간 공동행동 강화는 최근 노조 조직률 하락과 재정 악화를 상쇄시킬 대안으로 선택되고 있다. 올해 노조운동이 내놓은 처방책 중 하나는 브라질 양대 노총인 CUT와 Força Sindical가 나서서 조직한 인더스트리올 브라질 지부(IndustriALL-BRASIL)의 결성이다. 정부와 자본의 탈산업화 정책에 맞서 제조산업의 재활성화를 목표로 결성된 인더스트리올 브라질은 CUT와 Força Sindical 소속의 금속, 화학, 의류, 건설, 식품 및 에너지 분야 노조들을 망라한다. 이 두 노총은 규모와 영향력 면에서 1, 2위를 차지하며 1990년대 이후 줄곧 경쟁 관계였기 때문에, 양대 노총의 통합은 많은 이에게 매우 획기적이며 새로운 변화의 흐름으로 받아들여졌다. 물론 기존의 조직 체계를 유지한 채 이루어진 통합이라 조직 결합의 수준은 낮지만, 포괄하는 노동자만 1천만 명이 넘어 적잖은 파급력이 기대된다.

또 다른 예로는 심각한 재정난을 타개하고 가용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한 노총 간 통합이다. 2021년 8월 통합을 앞둔 브라질 일반노총(Cental Geral dos Trabalhadores do Brasil : 이하 “CGTB”)과 브라질 중앙노총(Central dos Trabalhadores e Trabalhadoras do Brasil : 이하 “CTB”)은 이념 지향성이 비슷하다 보니 빠르게 통합 결실을 보게 됐다. CGTB는 브라질 제1노총인 CUT의 뒤를 이어 1986년에 창립된 CGT에서 출발했으나, 1989년에 독립해 2004년에 CGTB로 조직 이름을 바꾸었다. CTB는 2007년에 창립되었는데 비공식 부문 노동자 조직, 퇴직자 연맹 및 연합노조 등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며, 정치

적 노선은 브라질 공산당(PCdoB)과 가깝다. 이와 같은 노총들의 통합 행보는 2017년 이후 정치적, 제도적 환경 변화가 없었다면 사실 쉽지 않았을 것이다. 추후 뚜렷한 상황 반전이 없다면 선명성을 앞세운 경쟁보다는 생존을 위한 연대와 통합의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복수노조 도입과 노조 모델 전환 전략

2019년 이후 보우소나루 정부가 노조개혁을 공식화하고, 의회에서 80여 년간 유지해 온 단일노조 모델을 폐기하며 복수노조를 도입하는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노조운동도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브라질 노조 모델인 단일노조 원칙은 1930년대 제툴리우 바르가스 시절부터 시행해 왔는데, 동일 산업·업종별로 한 지역 내에 하나의 노조만을 허용하며, 이 노조는 사용자와 노동법원, 정부를 상대로 독점적 대표권을 갖는다. 단일노조 원칙은 1990년대 이후 노조 조직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지역 관할권과 대표성 시비 때문에 노노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03년 룰라 정부 때 구성한 노사정 전국노동포럼에서 주요 의제로 대안적 노조 시스템 방안을 논의했는데 노조 내부의 의견 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시 단일노조 모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측에서는 ILO 협약 제87조에 따라 결사의 자유를 전면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고 싶어 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단일노조 모델 이외의 방안은 재고의 여지가 없다며 완강하게 반대했다. 이에 따라 이 이슈는 그동안 노조운동 내 첨예한 이견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2019년 1월에 출범한 보우소나루 정부가 노동개혁팀을 구성하는 등 노조개혁 카드를 꺼내면서 10여 년 만에 다시 노조 시스템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뒤이어 자유당 소속 마르셀로 라모스(Marcelo Ramos) 하원의원이 헌법 제8조 개정안(PEC 196)을 발의하면서 의회에 노조개혁 특별위원회가 설치됐다. 마르셀로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는 자유로운 노조 조직 및 공무원 단체교섭권 보장, 복수노조 도입 등이 담겼으며, 노사 자율로 노동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노사전국위원회 신설을 제안해 노총 조직들의 관심을 끌었다.[9] 법안이 발

9) Lúcio, C. G.(2020), "A reforma das relações sindicais volta ao debate no Brasil", *Estudos Avançados*, 34(98), pp.127-142, http://www.scielo.br/pdf/ea/v34n98/0103-4014-ea-34-98-127.pdf (검색일 : 2021.5.21).

표되자마자 CUT, Força Sindical, UGT, CSB 등은 헌법 제8조 개정안이 브라질 노조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담고 있다며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뜻을 밝혔다.[10] 특히 세르지오 노브리(Sérgio Nobre) CUT 위원장이 단일노조 모델은 구시대의 산물이라며 공개적으로 복수노조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11] 그러나 사회주의, 공산당 계열인 CTB나 CGTB는 신자유주의 우파 정부에 맞서 투쟁 전선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 복수노조 문제는 노조 진영의 분열을 야기한다며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12] 이처럼 입장이 다르다 할지라도 헌법 제8조 개정안은 노동개혁 이후 노조운동의 돌파구를 열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인식되면서 노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주요 이슈로 부상하지는 못했다. 최근 정부가 노조 등록제, 단체교섭 구조, 노조 대표성에 대한 포괄적 입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리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13]

노동조합 구조 및 활동 혁신과 새로운 노조주의 전략

최근 들어 노동조합 외부에서는 노조운동의 위기를 거론하면서 조직 구조와 활동 혁신의 필요성을 많이 언급한다. 대표적으로 오랫동안 노조 연구를 해왔던 로베르트 베라스(Roberto Véras de Oliveira) 경제학 교수는 노조운동의 약화는 노조세 폐지나 정부의 반노동정책에서 비롯됐지만, 근본 원인은 정규직 중심의 낡은 조직 구조와 관성적 활동에 있다며 조직화 모델에 기반을 둔 새로운 노조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14] 기존에 정규직 조합원의 이해

10) DIP(2019.12.17), “CUT, CSB, Força e UGT “valorizam” aprovação da PEC 196, na CCJ”, https://www.diap.org.br/ (검색일 : 2021.5.24).
11) CUT(2021.4.5), “Quem esta morrendo na pandemia e a classe trabalhadora, diz Sergio Nobre”, https://www.cut.org.br/ (검색일 : 2021.5.24).
12) SINTRACOM(2019.12.18), “CENTRAIS DENUNCIAM A PEC 196 : "MAIS UM GOLPE NA ORGANIZAÇÃO SINDICAL"”, https://sintracomlondrina.com.br/ (검색일 : 2021.5.23).
13) DIAP(2020.10.14), “A Reforma Trabalhista-Sindical para 2021”, https://www.diap.org.br/ (검색일 : 2021.5.22).
14) FES(2020.12), “SINDICALISMO QUE CAMINHOS SEGUIR?”, http://library.fes.de/pdf-files/bueros/brasilien/17123.pdf (검색일 : 2021.5.22).

에 머물렀던 운동을 성찰해보고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사업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노동연구소 디에지(DIEESE)의 연구원이었으며 노동운동의 대표적 논객인 클레멘테 간즈 루시오(Clemente Ganz Lúcio) 또한 일곱 가지 노조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노조활동에 30세 미만 청년층의 참여를 촉진할 것, 둘째, 임금인상 요구와 투쟁을 뛰어넘어 노동과 사회적 권리에 대한 요구로 전환할 것, 셋째,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 구조로 혁신하기 위해 대담한 프로젝트를 구상할 것, 넷째, 지역운동과 결합할 것, 다섯째, 단체교섭 및 사회보호서비스를 통해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할 것, 여섯째, 노조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할 것, 일곱째, 불필요한 조직 간 경쟁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5년 동안 신생 노총 설립을 자제하고 노조들의 연대·연합을 강화할 것 등이다.[15] 노조 진영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며 조직별로 논의를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다. 노동시장 구조와 노사관계 시스템의 변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현존 질서만으로는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브라질의 노조운동은 위기와 기회의 양 갈래 길에 서 있다. 인적·물적 자원의 파괴, 노조활동력 약화 등 전반적인 약세 속에서도 다행인 것은 위기가 새로운 전환의 디딤돌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쟁과 갈등보다 통합과 연대를 강화하거나, 기존의 정규직 중심 활동에서 벗어나 비정규 조직화 사업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무엇보다 수십 년 동안 묵혀온 과제인 노조 시스템, 단일노조 모델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 새로운 노조운동의 전환에 들어섰다고도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를 추동하고 끌고 나갈 주체 세력이 아직 미약한 것인데, 따라서 향후 CUT나 Força Sindical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KLI

15) INSTITUTO HUNANITAS UNISINOS(2021.4.20), “Caminhos para os sindicatos construírem seu futuro em um mundo do trabalho em mudança”, http://www.ihu.unisinos.br/ (검색일:2021.5.23).

INTERNATIONAL

L A B O R

B R I E F

세계노동소식

INTERNATIONAL

L A B O R

B R I E F

미국 :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바이든 행정부가 인프라 투자 계획을 당면 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한 지역 간 디지털 정보 격차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욕 타임스 기사는 도시와 시골 간에 인터넷 속도가 큰 폭으로 차이 난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에 따른 경제 성장의 저해 및 고용문제를 다루고 있다.[1] 특히 팬데믹 기간에 많은 업무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온라인망의 수요가 높아졌지만, 약 4,200만 명의 미국인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살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시골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여러 비판에 직면했음에도, 광대역 인터넷망에 1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만큼은 여야를 막론하고 고른 지지를 받고 있다.

한편 이 기사는 아이오와주 마리온(Marion) 카운티의 사례를 들며 디지털 정보 격차가 고용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고속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의 고용주가 젊은 인력을 수급·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팬데믹은 이러한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냈는데, 비대면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이 지역의 노동자 다수는 인터넷 문제로 인해 재택근무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때문에 시골지역의 일부 기업은 시간당 고임금을 내걸었지만 인력 채용에 문제를 겪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애디 토머(Adie Tomer)는 "민간부문이 이 문제를 다루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시골지역의 경우 수요가 적고 분산된 탓에 비용 대비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낮아 민간기업의 인프라 개선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대적인 인터넷 설비 투자 계획은 반가운 지점이다. 과연 이 계획이 고질적인 지역 간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1) The New York Times(2021.5.17), "Rural Areas are Looking for Workers. They Need Broadband to Get Them", https://www.nytimes.com/ (검색일 : 2021.5.24).

미국 : 2021년 4월 신규 일자리 수 기대치에 밑돌아

2021년 4월 동안 미국 내 신규 일자리가 26만 6천 개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1] 이는 3월의 77만 개 신규 일자리에 비해 크게 낮아진 수치이며, 특히 백신 보급 및 바이러스 감염 감소 등 팬데믹 관련 호재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경제학자들의 예상치를 훨씬 밑돈다. 팬데믹 시작 후 2개월 만에 2,200만여 개의 일자리가 갑작스럽게 사라진 이후 점차 회복 추세에 있었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에

비해 800만여 개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며, 현재 추세로 보면 2023년 말까지 이 일자리 공백을 메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경제 회복에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더딘 신규 일자리 수 추이는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통과시켰던 경기부양책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다. 공화당은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받으며 직장에 복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아칸소주, 몬타나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 공화당 지역에서는 실업수당 폐지 움직임이 보이고, 미국 재계와 상공회의소 역시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경기부양책이 미국인에게 필수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한편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고 반박했다. 몇몇 경제학자 역시 일자리 증가가 더딘 이유는 실업수당을 넘어 여러 요인의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예로 여전히 많은 학교가 정상 운영되지 않아 보육문제가 심각한 점,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는 점 등을 꼽았다. 한편, 다소 실망스러운 일자리 수 추이에도 불구하고 항공 및 식당, 호텔 등에서는 채용이 크게 증가했고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팬데믹 이래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긍정적인 신호도 곳곳에서 포착된다.

1) The Washington Post(2021.5.8), "U.S. Picked Up just 266,000 Jobs in April, well below Expectations as Economy Struggles to Rebound", https://www.washingtonpost.com/ (검색일 : 2021.5.24).

미국 : 2021년 5월 첫 주, 실업급여 청구건수는 총 47만 3천 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저 수준 기록

미국 노동부는 2021년 5월 첫 주에 미국에서 총 47만 3천 건의 실업급여 청구가 신규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4월 마지막 주의 50만 7천 건보다 3만 4천 건이 줄어든 것이다. 2021년 1월에 매주 90만 건의 실업급여 청구가 신규 발생하였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건수이며, 2000년 초부터 시작된 미국 내 코로나19의 본격적인 확산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1]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미국 경제가 점차 다시 활성화되고 있으며 백신 접종 등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이 사업을 재개하는 등 고용 활성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기 및 노동시장의 회복 추세는 5월 말~6월 초부터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6일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각종 법이나 정책에 의해 특별히 제한되지 않은 경우, 백신 접종 후 2주가 지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개인들은 마스크 착용 및 물리적 거리두기 제한을 더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하였

다.[2] 이에 따라 사업체들의 운영과 경제활동이 속속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 노동시장의 실업률도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 Politico(2021.5.13), "U.S. Unemployment Claims Drop to 473,000, a New Pandemic Low", https://www.politico.com/ (검색일 : 2021.5.19).
2)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2021.5.16), "When You've Been Fully Vaccinated : How to Protect Yourself and Others", https://www.cdc.gov/ (검색일 : 2021.5.19).

미국 :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4개 주,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지급되는 추가 실업급여 중단 시도

현재 코로나19 백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미국 경제와 노동시장이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4개 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3월 11일에 서명한 1.9조 달러(약 2,100조 원) 규모의 3차 경기부양 예산안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실업급여(주당 300달러)를 중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1]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짐 저스티스(Jim Justice) 주지사는 2021년 5월 14일 브리핑에서 일자리 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일부 사업자는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저스티스 주지사는 이러한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실업급여 지급을 종료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라 웨스트버지니아주는 6월 19일 자정에 맞춰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코로나19 대유행 관련 실업 프로그램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상된 실업급여로 인해 사람들이 다시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실업급여 인상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개인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신에게 적합한 좋은 일자리를 탐색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며, 결과적으로 이는 미국 경제 전반과 노동시장의 궁극적인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와 같이 앞서 언급한 상반된 입장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으로 인해 인상된 실업급여가 대유행 이전의 수준으로 좀 더 빨리 돌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 CBS News(2021.5.24), "At least 24 Republican-led States are Ending Increased Unemployment Benefits as Governors say Businesses Need Workers", https://www.cbsnews.com/ (검색일 : 2021.5.25).

독일 : 연방통계청, 2019년 장애인 고용 현황 발표

사회보장제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독일의 경우에도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중순에 독일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장애인 중 약 57%가 취업하여 직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기간, 동일 연령대의 비장애인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약 82%인 것과 비교해 약 25%p의 차이를 보였다. 지난 2009년의 장애인 고용 현황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약 52%, 비장애인은 79%였다. 전체적으로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증가한 가운데 비장애인의 증가율(+3%p)보다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조금 더 증가(+5%p)하긴 하였지만, 그 격차의 감소폭(-2%p)을 고려할 경우 장애인의 고용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1)2)]

2019년 통계 기준, 독일에 약 1,040만 명의 장애인(중증장애인 약 760만 명)이 거주하는 가운데, 약 490만 명이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경제활동 가능인구에 해당했다.

장애인 고용은 산업분야별로 다소 큰 격차를 보였다. 장애인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산업분야는 (공공 및 민간) 서비스 분야로, 전체 장애인 경제활동인구의 약 31%가 이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 경제활동인구의 약 25%가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 분야는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활성화된 산업분야로 평가할 수 있다. 서비스 분야 중에서도 보육 및 학교 교원을 비롯하여 보건·사회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장애인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약 26%를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소매업, 자동차 정비, 음식·숙박업 분야의 경우에는 장애인 경제활동인구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들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비장애인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18%였으나, 장애인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14%에 불과하였다.

장애인의 경제활동인구비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원인으로는 낮은 정규교육과정의 이수 수준이 지적되고 있다. 25세 이상 44세 미만의 장애인 중 약 16%는 일반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의 경우 약 3.5%만이 일반학교 교육과정을 전혀 이수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것에 비하면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인의 비율이 약 4배에 달하는 것이다. 또한 2019년 통계를 기준으로 15세 이상 전체 장애인 중 단지 12%의 장애인만이 대학입학자격시험인 아비투어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장애인의 경우 이 비율은 약 28%로, 장애인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 통계청의 발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진행된 설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코로나19 여파가 (장애인)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다음번에 진행되는 미시 인구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연방통계청(destatis) 언론보도용 자료(2021.5.18), “57% der Menschen mit Behinderung zwischen 15 und 64 Jahren waren 2019 in den Arbeitsmarkt integriert”, https://www.destatis.de/ (검색일 : 2021.5.21).
2) 연방통계청(destatis)(2021), “Öffentliche Sozialleistungen Lebenslagen der behinderten Menschen Ergebnis des Mikrozensus”, https://www.destatis.de/ (검색일 : 2021.5.21).

독일 : 독일의 단체협약 적용률, 감소 추세 지속

독일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IAB)가 매년 약 1만 6천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독일 전체 노동자의 산업별 단체협약 적용률은 43%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동독 및 서독 지역 간의 격차는 여전히 크게 나타났는데, 구서독 지역의 경우에는 약 45%, 구동독 지역은 약 32%의 노동자가 산업별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의 경우 구서독이 46%, 구동독이 34%였던 것에서 다소 감소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IAB의 수잔나 코하우트(Susanne Kohaut) 연구원은 산업별 단체협약 적용률의 감소 추세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평가하였다.[1)]

기업별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노동자의 비율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였다. 기업별 단체협약의 경우에는 산업별 단체협약과는 달리 구동독 지역이 구서독 지역보다 높은 적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2020년의 경우 구서독 지역의 기업별 단체협약 적용률은 8%, 구동독 지역은 11%로 나타났다.

어떤 형식이든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노동자의 비율은 구서독 지역이 53%, 구동독 지역이 43%로 나타났으며, 두 지역 간에 약 10%p의 격차를 보였다.

또한 단체협약 적용률은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단체협약 적용률이 특히 높게 나타난 산업분야는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서비스 분야로 적용률이 약 80% 수준에 달하였던 반면, 정보·통신 분야는 약 11%의 노동자만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단체협약 적용률이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하였다.

사업장 단위에서 집단적 노사관계의 당사자인 종업원위원회가 설치된 사업장의 노동자 비율은 2020년 설문 결과 구동독 지역이 36%, 구서독 지역이 40% 수준으로 약 4%p의 격차를 보였다. 이는 약 10%p 수준인 단체협약 적용률의 격차보다는 작은 것으로, 지난 몇 년 동안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6년의 경우 종업원위원회가 설치된 사업장의 노동자 비율은 동·서 지역 간에 9%p 수준의 격차를 보였다.

1)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IAB) 언론보도용 자료(2021.5.19), “Tarifbindung nimmt in Deutschland weiter ab”, https://www.iab.de/ (검색일 : 2021.5.21).

영국 : 코로나19와 브렉시트로 외국인 노동자가 떠나면서 노동력 공급 부족

2021년 5월 17일 로이터 등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에서 봉쇄정책이 완화됨에 따라 음식·숙박업 및 소매업 부문을 중심으로 구인이 크게 늘고 있으나 코로나19와 브렉시트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 공급이 감소하면서 노동력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다.

영국 정부는 2021년 4월 12일부터 음식·숙박업 및 소매업의 실외 영업을 허가했고, 5월 17일부터는 실내 영업까지 허가하는 등 봉쇄정책을 점차 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인광고 검색엔진 아드주나(Adzuna)에 올라온 구인광고 건수는 호텔, 레스토랑 및 여가 분야를 중심으로 6주 전보다 18% 증가하여 5월 첫째 주 기준 98만 7,800건에 달했다. 또한 공인인력개발연구소(CIPD)가 사용자 1천여 명의 2021년 2분기 고용계획을 조사한 순고용 점수는 +27점으로 지난 2013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반면 영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외국인 노동자 수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드주나는 올해 2~4월 중 영국 내 일자리에 지원한 서유럽 및 북미 출신 노동자 수가 팬데믹 이전에 비해 월 25만 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저임금 서비스 부문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크게 줄면서, 일부 도시에서는 일자리 수가 구직자의 20배에 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아드주나의 공동 창업자 앤드류 헌터(Andrew Hunter)는 음식·숙박업 및 소매업 부문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봉쇄정책을 계기로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게 되면서 구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더 이상은 해당 산업의 노동력 부족을 외국인 노동자로 메우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인인력개발연구소의 노동시장 수석 고문 게르윈 데이비스(Gerwyn Davies)도 전통적으로 EU 노동자들에게 의존해온 산업의 고용주들이 앞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직원을 유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1)2)3)]

1) Reuters(2021.5.17), “UK Firms Seek Staff after Lockdown but Foreign Workers Missing - Survey”, https://www.reuters.com/ (검색일 : 2021.5.25).
2) The Guardian(2021.5.16), “UK ‘Faces Labour Shortage’ as Covid and Brexit Fuel Exodus of Overseas Workers”, https://www.theguardian.com/ (검색일 : 2021.5.25).
3) CIPD(2021.5.17), “Labour Market Outlook : Spring 2021”, https://www.cipd.co.uk/ (검색일 : 2021.5.25).

영국 : 노총, 투자회사에 기업 임원의 고임금 책정에 반대할 것을 요구

유나이트(Unite), 유니손(Unison), 프로스펙트(Prospect) 등 300만 명의 영국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들이 기업 임원의 고임금 책정에 반대할 것을 요청하는 공동 서한을 60여 개의 대형 투자회사에 보냈다. 노동조합은 서한에서 2020년부터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는 연례보고서에 임원과 일반 직원 간의 임금 격차를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된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서한과 함께 보낸 지침을 보면, 임원과 일반 직원 간의 임금 격차가 불합리하게 큰 경우에는 연례 주주총회에서 임금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거나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투표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노조들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연례 주주총회 시기를 맞은 기업들에 임금 격차를 줄이라는 압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리오 틴토(Rio Tinto), 인디비어(Indivior), 폭스톤스(Foxtons) 등의 임원 임금 책정에 투자자들이 반대하였고, 영국 상장기업 중 올해 연례 주주총회에서 임금 책정을 승인받은 비율은 91.4%로 지난해(94.8%)보다 하락하였다.

한편, 서한 발송에 동참한 민간연구소 고임금센터(High Pay Centre)에 따르면, FTSE 100에 상장된 기업의 2020년 평균임금 중 임원의 보수는 일반직원의 119배 이상이었다. 노동조합들은 이 격차로 인해 영국이 고소득 국가들 중 가장 심각한 소득 불균형을 경험하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도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임금은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 및 이직률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영국 최대 자산관리 회사인 리갈 앤 제너럴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Legal & General Investment Management : LGIM)와 피델리티 인터내셔널(Fidelity International) 등 다수의 대형 투자회사들은 임원 보수의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특히 직원들의 경험을 반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1)]

1) Financial Times(2021.5.13), “UK Trade Unions Call on Investors to Tackle Boardroom Pay”, https://www.ft.com/ (검색일 : 2021.5.25).

프랑스 : 코로나19 보건위기 여파 속 2021년 1분기 일자리 수치 반등

코로나19로 인해 계속되는 보건위기와 봉쇄조치에도 불구하고 고용 상황은 개선되고 있다. 2021년 5월 7일 발표된 프랑스 통계청(INSEE)의 잠정 추정치에 따르면 1분기에 민간부문 임금노동 일자리는 5만 7,300개(0.3%) 증가했다. 이는 지난 3월의 부정적인 전망(7만 7천 개의 일자리 감소)을 압

도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반등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 고용은 2018년 말 수준에는 도달했지만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보다는 여전히 낮다(2019년 말 대비 -1.3%). 2020년 상반기 1차 봉쇄정책의 영향으로 노동시장 상황은 급격히 악화(-3.2%)된 바 있고, 2차 봉쇄정책은 노동시장에 다시 한번 악영향을 주었지만 그 여파는 상대적으로 미미했다(-0.1%). 2021년 1분기에 노동시장의 진정한 척도라고 볼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시장은 3분기 연속 증가(+0.1%) 후에 안정화되었으나, 이는 2020년 초의 전례 없는 큰 폭의 감소(-40.3%/3개월간 31만 7천 개의 일자리 감소)를 상쇄하지는 못했다. 결과적으로 2021년 3월 기준 비정규직 고용은 2019년 말 대비 5.2%(4만 1,200개의 일자리 감소)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1년 1분기에 민간부문 전체에서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비정규직 제외). 코로나19가 시작된 이래, 공업부문에서 처음으로 증가세(+0.2%/4,900개의 일자리 증가)가 나타났으나 여전히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1.7%/5만 2,800개의 일자리 감소). 음식·숙박업 등과 봉쇄조치의 영향을 받는 상업서비스부문에서도 임금노동 일자리(비정규직 제외)는 완만하게 증가했다(+0.2% 또는 2만 7천 개의 일자리 증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해당 부문에서 약 3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바 있다. 반면 건설부문의 고용은 3개월 만에 1.2% 증가(1만 6,800개의 일자리 증가)하여 위기 이전 2019년 말 대비 3.3% 더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공공행정, 교육, 보건 및 사회활동 분야의 서비스부문 고용은 0.3%(7,200개의 일자리 증가) 증가하여 2019년 말보다 1.2%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1)]

1) Les Echos(2021.5.7), “Rebond surprise de l'emploi en France malgré les restrictions sanitaires”, https://www.lesechos.fr/ (검색일 : 2021.5.25).

프랑스 : 코로나19로 직업교육 이수한 청년들의 사회 진출에 제한

2021년 5월 20일 노동부에서 발표한 보고서[1)]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20년 1월 기준, 2019년에 학교를 떠난(졸업장 유무에 관계없이) 수습생의 62%와 직업고등학교 졸업자의 41%가 취업한 상태였으며 2020년 7월에는 수습생의 65%와 직업고등학교 졸업자의 44%가 취업하여,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극도로 제한된 2020년 상반기 이들의 고용률은 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인해 2020년 상반기에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저해되었음을 보여준다. 2018년에 발표된 이전 자료를 보면 동일기간 수습생과 직업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률은 매년 1월부터 7월 사이에 6~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코로나19

로 인해 모든 중등 및 고등직업교육(직업자격취득(CAP), 실업대학 입학자격취득(Bac Pro), 고등기술자격취득(BTS))과정에서 사회진출 기회가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장을 취득하는 것은 사회진출에 유리하다. 졸업자의 고용률(69%)은 모든 교육 수준에서 비졸업자(56%)보다 항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보고서의 저자들은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연구는 또한 성 불평등에도 주목했는데, 2019년 졸업자 중 남성의 고용률(66%)은 여성의 고용률(61%)보다 높아 좀 더 사회진출에 용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성 불평등 격차에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다.[2)]

1) Collin, C., N. Marchal(2021), "Des lycéens professionnels et des apprentis mieux insérés 12 mois après leur sortie d'études que 6 mois après, malgré la crise", *DARES Focus*, No.24, https://dares.travail-emploi.gouv.fr/ (검색일 : 2021.5.25).
2) Les Echos(2021.5.20), "La crise n'a pas stoppé l'insertion professionnelle des jeunes mais l'a ralentie", https://www.lesechos.fr/ (검색일 : 2021.5.25).

일본 : 후생노동성, 우버이츠 배달원의 산재보험 특별가입 검토

2021년 5월 14일 후생노동성은 개인사업주가 스스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산재보험에 특별가입할 수 있는 제도의 대상으로 식음료배달대행업 종사자와 IT 엔지니어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1)]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산재보험도 고용된 노동자가 업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며,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한다. 단, 개인사업자라도 사고위험이 큰 직종은 특별가입 대상이 되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021년 4월부터는 연예계 종사자, 애니메이터, 유도정복사[2)] 등의 세 직종이 특별가입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우버이츠, 데마에칸[3)] 등의 배달대행업체 사업주가 가입한 일본 푸드딜리버리 서비스협회에 의하면, 일본 내 프리랜서 자전거 배달원은 약 9만 명이다. 협회는 자전거 사고의 치사율이 자동차 사고보다 높고 사고에 대한 보상도 사업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인 배달원을 산재보험 특별가입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별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실제 가입이 늘어날지는 불투명하다. 또한 특별가입 조치의 도입으로 배달원의 안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버이츠 배달원들이 결성한 우버이츠 노동조합의 간부는 "특별가입이 아니라 기업 측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형태로 산재보험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1) 朝日新聞(2021.5.14), 「労災保険の“特別加入” ウーバー配達員の加入を検討」, https://digital.asahi.com/ (검색일 : 2021.5.20).
2) 유도정복사(柔道整復師)는 접골원 등에서 물리치료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3) 데마에칸(出前館)은 일본의 대표적인 음식배달대행업체 중 하나이다.

일본 : 4명 중 1명이 취업활동 중 성희롱 피해 경험[1)]

후생노동성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학 또는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활동을 하거나 인턴십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취업활동 중 겪은 성희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5.5%가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26.0%, 여성이 25.1%로 남녀 모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의 내용은 “성적인 농담과 놀림”(40.4%)이 가장 많았고, “식사나 데이트 등 끈질긴 권유”(27.5%)가 다음으로 많았다. “성적인 언행에 거부감을 표해 내정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11.0%)나 “성관계 강요”(9.4%) 등의 사례도 있었다.

피해를 받은 상황에 대해서는 “인턴십에 참여했을 때”(34.1%)가 가장 많았으며, “기업 설명회나 세미나에 참여했을 때”(27.8%)의 비중도 높았다.

성희롱을 당한 후의 행동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24.7%)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대학의 커리어센터나 가족, 친구, 지도교수 등에게 상담한 사람은 10~20%에 그쳤다.

1) 朝日新聞(2021.5.13), 「“就活セクハラに遭った” 4人に1人 厚労省が初調査」, https://digital.asahi.com/ (검색일 : 2021.5.20).

중국 : 제7차 인구센서스 조사 결과 발표

최근 중국 정부는 2020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 제7차 인구센서스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국의 총인구 수는 14억 1,178만 명으로 집계돼 2010년 제6차 인구센서스 결과인 13억 3,972만 명에 비해 7,206만 명(5.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 전체 인구 중 0~14세 인구는 2억 5,338만 3,900명으로 17.95%를 차지했고, 15~59세는 8억 9,437만 6천 명으로 63.35%를 차지했으며, 60세 이상 인구는 2억 6,401만 8,800명으로 18.7%를 차지했다. 중국에서는 15~59세의 인

구를 생산가능인구로 규정하는데, 이번 조사 결과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10년에 비해 6.79%p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0~14세 인구 비중은 1.35%p 증가했고,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5.44%p 증가했다. 그리고 전체 지역 중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광둥, 베이징, 저장이었고,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허난, 광시, 허베이 순으로 나타났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하락폭이 가장 낮은 지역은 톈진, 베이징, 허베이 순이었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인 광둥은 그 비중이 2010년보다 4.59%p 감소한 68.8%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5.45%p 높았다. 2010년 조사 당시 광둥 지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전국에서 일곱 번째에 그쳤는데, 이번에는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외부 인구가 광둥 지역으로 대량 유입된 것과 관련이 있다. 후강 화난도시연구회 회장 겸 지난대학교 교수는 "최근 광둥 주강삼각주 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가속화되고 첨단 제조업과 정보통신경제 등 신흥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취업인구가 대량 유입했고, 주강삼각주 지역이 최근 정착 제한을 완화하면서 많은 사람의 정착을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광둥성인구발전연구원 둥위정(董玉整) 원장은 "광둥 지역의 인구는 전반적으로 비교적 젊으며 인력자원개발의 잠재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주장했다.

저장성의 유동인구는 총 2,555만 7,500명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성 외부로부터의 유동인구는 1,618만 6,500명, 성 내부의 유동인구는 937만 1천 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저장성에서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농촌 노동력과 전국의 IT 분야 인재를 대량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조사 결과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감소 원인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석됐다. 첫 번째 유형은 베이징과 상하이의 사례이다. 두 도시의 외부 유입 인구는 2014년에 정점을 찍은 후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데, 두 도시에서 추진한 인구 통제 및 산업 조정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두 번째 유형은 톈진, 허베이, 랴오닝, 지린, 산둥 등의 지역으로, 이 지역 모두 에너지 및 중화학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이 최근 하락 압력에 직면하고 있어서 관련 종사자의 유출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2)]

1) 中国新闻网(2021.5.21),「从第七次人口普查数据看人口变动的长期趋势及其影响」, https://www.chinanews.com/ (검색일 : 2021.5.23).
2) 中国新闻网(2021.5.14),「31省份劳动年龄人口占比 : 广东北京浙江居前三」, https://www.chinanews.com/ (검색일 : 2021.5.23).

브라질 : 연방 대법원, 단체교섭 없는 정리해고의 합법성 여부 다룬다

조만간 정리해고 판결을 둘러싼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최근 브라질에서는 단체교섭 없는 집단해고의 합법성을 두고 지역 노동법원마다 다른 판결을 내려 많은 혼란이 발생했다.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2017년 노동개혁으로 수정된 통합노동법 제477조 A항에 대한 해석이다. 제477조는 해고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A항에서 개별 및 집단 해고는 그 효력을 위해 노조의 사전 승인이나 단체협약 체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기업이 해고를 개시할 때 단체교섭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인데, 개별 해고와 집단 해고를 동일시할 수 있냐는 점에서 의견이 엇갈린 것이다. 먼저, 이 둘을 동일시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는 집단 해고의 경우 노동자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 및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통한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최근 공장 철수 및 이전을 이유로 대량해고가 발생했던 포드와 LG전자의 예를 들어 해고 관련 노사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단체교섭이 큰 역할을 했다며, 집단 해고는 개별 해고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둘을 동일시하는 입장에서는 통합노동법의 조항을 있는 그대로 해석할 때, 사용자에게는 단체교섭 의무가 없으며, 이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법적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1)]

이 문제가 지방노동법원에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이르게 된 경위는 브라질 전역의 바비큐 식당 체인점인 포고 데 샤웅(Fogo de Chão)의 정리해고에서 시작됐다.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2020년에 포고 데 샤웅은 경영난을 이유로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 브라질리아 지점에서 약 420여 명을 해고했다. 이를 조사하던 리우데자네이루 노동검찰청은 유명 바비큐 식당이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직원을 대량 해고했다며 2020년 5월 각 지역 노동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리우데자네이루 지방노동법원(TRT-1)의 안나 라리사(Ana Larissa) 판사는 해고된 직원 112명을 복직시키고 10명 이상의 직원에 대한 집단 해고 금지 판결을 내렸으나, 브라질리아주 하급심과 고등노동법원은 대량해고를 합법으로 판결했다. 이처럼 같은 사건을 두고 법원마다 다른 판결을 내리자 전국적으로 노동법 제477조 A항의 해석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돼 결국 연방 대법원이 나서게 된 것이다. 만약 대법원이 기업에 대해 해고 개시 전 단체교섭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경우 기업의 반발 등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1) Folha de S.Paulo(2021.5.9), “STF vai definir se empresa pode demitir em massa sem negociação coletiva”, https://www1.folha.uol.com.br/ (검색일 : 2021.5.12).

브라질 : 연방 대법원, 2022년부터 극빈층 대상 기본소득 지급 명령

4월 26일 연방 대법원은 정부에 대해 브라질 극빈층을 지원하기 위한 최저 기본소득을 설정하고 2022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기본소득은 의식주와 교육 및 건강을 위해 필요한 최소 지출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며, 월 소득이 89~178헤알(약 1만 9천~3만 8천 원)인 자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선 변호인협회(Defensoria Pública : DPU)는 2004년 기본소득법이 제정된 후로 17년 동안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극빈층을 위해 기본소득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소송을 낸 바 있다.[1] 브라질은 2014년까지 볼사 파밀리아(Bolsa Família)[2] 같은 사회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빈곤율이 감소해 왔으나, 최근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면서 극빈층이 빠르게 증가했다. 2021년 4월 브라질의 대표적 민간 연구기관인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Fundação Getulio Vargas : FGV)은 브라질의 빈곤층 인구가 2020년 8월 950만 명에서 2021년 2월에는 2,700만 명으로 불과 1년도 안 돼 약 3배나 증가해 브라질 인구의 12.8%를 차지하며, 이들 중 많은 가족이 한 달에 246헤알(약 5만 1천 원)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3]

1) G1(2021.4.26), "STF manda governo fixar valor para renda básica e pagar benefício a partir de 2022", https://g1.globo.com/ (검색일 : 2021.5.12).
2) 볼사 파밀리아(Bolsa Família)는 1인당 소득이 월 89헤알(약 2만 원) 미만인 극빈층이나 임산부, 아동 또는 청소년을 둔 빈곤 가족(1인당 소득 월 2만~3만 7천 원)을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현재 1,390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
3) G1(2021.4.5), "Número de brasileiros que vivem na pobreza quase triplicou em seis meses, diz FGV", https://g1.globo.com/ (검색일 : 2021.5.12).

INTERNATIONAL

L A B O R

B R I E F

해외연구동향 원고모집 안내

『국제노동브리프』는 해외 주요국의 고용·노동 관련 주요 제도와 동향을 국내에 소개하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월간지입니다. 아래와 같이 다양한 최신 해외 연구논문을 소개하는 '해외연구동향' 섹션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1. 원고 제출방법

- 주제 및 내용 : 최근 3년 이내 발간된 고용·노동 관련 주제의 해외 연구 논문(한 편 또는 여러 편 비교) 또는 책 등 최신 연구 결과물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한다.
- 원고분량 : 지정된 작성요령에 따라 A4 10매 내외
- 원고제출 : 이메일(soohyang@kli.re.kr) 수시 접수

2. 원고 작성요령

- 원고는 본문(머리말-본론-맺음말 형식을 취함)과 참고문헌으로 구성한다.
- 본문의 번호 체계는 자유롭게 사용한다.
- 표와 그림은 〈표 1〉, [그림 1]과 같이 표기하고, 그림의 경우 편집을 위한 엑셀이나 jpg 등의 원본 파일을 제공한다.
- 본문이나 각주에서 언급한 문헌정보는 참고문헌에 포함한다.
- 참고문헌 표기는 아래 작성 예시를 따른다.

〈국문 및 동양 문헌〉
정기간행물 : 필자(발행연도), 「논문명」, 『서명』, 권(집)호, 페이지 순(pp.○~○)으로 표기
단행본 : 필자(발행연도), 『서명』, 발행처, 페이지 순으로 표기

〈영문 문헌〉
정기간행물 : 필자(발행연도), "논문명", 서명*(이탤릭체)*, volume(number), 페이지 순으로 표기
단행본 : 필자(발행연도), 서명*(이탤릭체)*, 발행처, 페이지 순으로 표기

3. 원고료

- 내부 절차에 따라 검토를 거쳐 『국제노동브리프』 게재가 확정되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4. 문의처

- 한국노동연구원 국제협력실

독자의견 수렴

한국노동연구원은 국제노동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하기 위해 『국제노동브리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국제노동브리프』가 다룬 내용 중 흥미로운 점이나 지적하고 싶은 점, 또는 주제 제안이나 기타 건의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반영하여 향후 더 풍부한 읽을거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　화 : 044-287-6093
- 이메일 : soohyang@kli.re.kr

한국노동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 : 044-287-6093 FAX : 044-287-6099 http://www.kli.re.kr